

# 새로운 먹거리운동을 위한 전국 학교급식 활동가 워크숍

2013. 7. 5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 □ 목 차 □

I. 워크숍 개요 .....	5
-----------------	---

II. 주제발표 .....	9
----------------	---

주제발표 1 2010-2013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과제 - 2014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	9
: 이원영(친환경무상급식폴뿌리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주제발표 2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부흥기를 개척하자! .....	35
: 김현곤(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사무처장)	

주제발표 3 시군구 먹거리 기본조례(안) .....	81
: 하승수 변호사	





## 워크숍 개요





# 1

## I 워크숍 개요

### 가. 개최 배경

-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하반기 실천계획을 공유하고, 학교급식 운동 10년의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급식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3년 7월 5일(금) 13시~7월 6일(토) 13시
- 장 소 : 충남 공주시 고마복합예술센터
- 주 최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 후 원 : (재)지역재단

# 2

## 워크숍 진행 프로그램

일정		장소 및 내용
7/ 5 (금)	13:30-14:00	등록
	14:00-14:20	인사말 및 참가자 소개
	14:20-14:50	[주제발표1] 2010-2013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과제 - 2014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집행위원장)
	14:50-15:20	[주제발표2]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부흥기를 개척하자! (김현곤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사무처장)
	15:20-15:50	[주제발표3] 시군구 먹거리 기본조례(안) (하승수 변호사)
	15:50-16:10	휴식
	16:10-18:00	[분반 토론 및 발표] 2014년 지자체 선거를 대비한 급식진영의 정책과제 및 활동 방향
	18:00-19:00	석식
	19:00-20:00	급식 관련 단체 간담회 (급식연대+친농연+농민운동네트워크등)
	20:00-	뒷풀이
7/6 (토)	09:00-10:30	지역리더대회 분과별 발표(희망자)
	11:00-12:00	지역리더대회 폐막식(희망자)
	12:00-13:00	중식후 해산



# II

## 주제발표

### 주제발표 1

2010-2013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과제

- 2014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주제발표 2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부흥기를 개척하자!

(김현곤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사무처장)

### 주제발표 3

시군구 먹거리 기본조례(안)

(하승수 변호사)



# 주제발표 1

## 2010-2013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과제 -2014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원영 집행위원장(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1. 2010년 이전 친환경무상급식운동

#### 1)친환경급식 중심의 급식운동 성과

##### <급식운동의 주체적 동력>

- 2002년부터 시작된 급식조례 제정 풀뿌리 운동-광역시, 기초단위 급식운동본부 결성.
- 조례 제정운동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촉발, 들불처럼 번지는 조례 제정 성과(주민발의 제정만 100여개 시도, 시군구에서 이루어졌음)
- 2002년 11월 급식조례제정과 급식법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운동본부의 학교급식법 개정 노력.

##### <급식운동 목표>

- 학교급식 직영 전환,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확대로 3대 목표 설정.
- 학교장, 위탁급식업자들의 조직적반발,우리농산물 사용 관련 WTO협정 위반 논란.
- 2006년 6월 초대형 식중독사고(46개 위탁급식학교, 3613명 학생) 이후 국회의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으로 식재료 품질기준, 직영원칙, 급식지원센터 설치 명문화 성과.

##### <급식지원 조례 제정, 법 개정 이후>

- 지자체의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 편성 급격한 확대, 직영전환 원칙 법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됨.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요구가 시작됨.
- 그러나 조례, 법의 한계로 중앙정부 친환경급식 시스템 개선 노력 부족, 센터 설치의 임의 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게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문제 해결, 급식 공급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전국민적

인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감.

- 한편으로는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다방면으로 제기되어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의 목소리가 촉발됨.

## 2)무상급식 확대로 운동의 중심 이동

- 2007년 권정호 경남교육감 후보 무상급식 공약, 당선.
- 2009년 4월 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상급식 공약, 당선.
- 2009년 가을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경예산이 교육위에서 삭감되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무상급식 이슈 급부상(국민적 요구와 실현가능성의 결합).
- 학교급식운동본부 차원에서 2009년부터 본격적인 무상급식 운동 추진 결의함.

### <참고> 2009년 9월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 실시 현황

시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도별 각급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서울	584	0	0.0	374	0	0.0	305	0	0.0	1,263	0	0.0
부산	296	3	1.0	171	0	0.0	143	0	0.0	610	3	0.5
대구	215	0	0.0	123	0	0.0	91	0	0.0	429	0	0.0
인천	224	0	0.0	126	0	0.0	111	0	0.0	461	0	0.0
광주	145	11	7.6	84	3	3.6	70	0	0.0	299	14	4.7
대전	138	7	5.1	86	1	1.2	66	0	0.0	290	8	2.8
울산	116	0	0.0	61	0	0.0	49	0	0.0	226	0	0.0
경기	1,112	84	7.6	556	0	0.0	397	0	0.0	2,065	84	4.1
강원	353	0	0.0	164	0	0.0	114	0	0.0	631	0	0.0
충북	258	148	57.4	131	4	3.1	82	1	1.2	471	153	32.5
충남	432	306	70.8	192	0	0.0	118	0	0.0	742	306	41.2
전북	417	291	69.8	204	128	62.7	130	53	40.8	751	472	62.8
전남	436	126	28.9	247	62	25.1	154	5	3.2	837	193	23.1
경북	496	169	34.1	278	8	2.9	193	1	0.5	967	178	18.4
경남	524	281	53.6	271	98	36.2	181	21	11.6	976	400	41.0
제주	106	1	0.9	42	0	0.0	30	0	0.0	178	1	0.6
합계	5,852	1,427	24.4	3,110	304	9.8	2,234	81	3.6	11,196	1812	16.2

\*무상급식 학교 비율이 전체학교의 16.2%로 초등학교 24.4%, 중학교 9.8%, 고등학교 3.6%에 불과함. 주로 충북, 충남, 전북 지역, 농산어촌학교임. 경남은 교육감 의지로 추진됨.

## 3)지방선거를 앞둔 정책 제안 이슈화

- 학교급식운동의 목표였던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전국에서 지방선거 주요

요구안으로 준비, 동시다발로 제기하였음.

-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적인 이슈로 한층 더 부각되었음.
-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무상급식은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됨.

#### 4) 2010년 이전 급식운동 평가

- 급식운동의 특징-학생 건강, 교육, 환경, 자치, 복지적 측면이 어우러진 사회적 주제였고 학부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제였음. 전국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요구사항이었음. 지역차원의 의제이자 전국차원 의제임.
- 급식운동 주체의 특징-학부모, 농민, 뿔뿌리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진보정당이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였음. 공통의 목표를 향한 연대의 힘, 참여의 힘이 최고조로 발휘됨.
- 급식운동 성과의 특징-지역적 성과, 전국적성과가 동시에 나타남. 도시와 농촌, 노동복합을 불문하고 전국의 대부분 학교에 친환경급식 예산 지원(2009년 말 기준, 7533개교, 1807억원)이 이루어 짐.
- 급식운동 파급 효과 특징-학교 급식 및 먹거리의 정책적 중요성이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됨.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09년 5월에 제정, 11월에 시행됨.

## 2. 2010년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의 변화

### 1)급식운동진영의 급식 정책 주요 제안

#### ■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 보육에서 교육까지 무상급식 4단계 계획 수립

1단계 :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실시 및 보육시설 급식비 단계적 지원

2단계 :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2011년까지)

3단계 :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2012년까지)

4단계 :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및 무상급식 단계적 예산 배치(2013년까지)

- ▶ 학교급식법 개정, 중앙정부 예산지원 근거 마련
- ▶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비 무상지원(혹은 일부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 ▶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

#### ○ 결식아동 예산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

- ▶ 방학 중 휴일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확보를 통한 차별화
- ▶ 지원 대상자 규정 및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 ▶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조례화 및 아동복지법 개정
- ▶ 민간 자원 활용 및 결식아동 친환경급식지원시스템 구축

### ■ 안전한 급식과 안정적인 친환경급식 확대

#### ○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예산 확대

- ▶ 학부모 급식부담금 100% 전액 식재료비로 사용
- ▶ 지역 영·유아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식재료 사용 지원 확대
- ▶ 지역(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쌀 사용 시 100% 차액지원
- ▶ 지역산 1차 농축산물 식재료 100% 차액지원 및 의무사용 목표치 설정

#### ○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교육의 체계화

- ▶ 식생활교육 계획수립과 민관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예산 지원
-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식품안전·먹거리 교실’ 정기개설
- ▶ 식품안전·먹거리 분야 강사단 육성

#### ○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 좁히기

- ▶ 학교와 농촌마을 ‘1교 1촌’ 맺기 프로젝트 실시
- ▶ 친환경급식학교와 생산지를 직접 연계, ‘농민교사’로 식생활·먹거리교육을 내실화

### ■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 ○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 구축

- ▶ ‘직영전환 예외조항’ 삭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의 ‘위탁급식법 개악안’ 저지

○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설치

▶ 광역과 기초에 급식지원센터(로컬푸드지원센터)설치 추진, 예산 지원

▶ 관련 조례 제·개정,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예산 지원

○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 및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 신설

▶ 급식과 먹거리 시스템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 ■ 학교급식법 개정 등 제도개선

○ 학교급식법 개정

-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광역과 기초시군구 의무 설치 및 예산지원
- 직영급식 원칙 단서조항 삭제 등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개정

-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 보유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 무상급식 지원비와 친환경 차액 지원비 통합운영 및 센터를 통한 현물지원
-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결 기구화 및 실질적 운영
-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방안
- 학부모, 교사, 학생, 생산자, 급식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등

## 2)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의 친환경무상급식 공약화

-대구, 울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움.

-특히, 농촌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곳이 증가함.

-교육감의 경우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무상급식 추진 공약을 내세움.

### <참고-충남도지사 안희정 후보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3	중학교 까지 친환경 무상급 식 실 현	<p>○ 추진배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헌법에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li> <li>- 학교급식은 중요한 공교육 기능의 하나이며,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음</li> </ul> <p>○ 목 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들에게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 눈치 밥 주는 ‘유상급식’을 헌법 정신에 맞게 ‘무상급식’으로 확대</li> <li>-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농민에게는 소득확대 및 농촌살리기</li> </ul> <p>○ 이행절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과 함께 ‘충남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구성·운영</li> <li>-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li> </ul> <p>○ 이행기한 : 중기 계획(2010~2012)</p> <p>○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p>
---	-------------------------------------	--

### <참고-인천시장 송영길 후보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p>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lt;교육이 좋아 이사오는 인천, 교육 사각지대 없는 인천&gt;</p> <p>① 교육지원예산 1조원을 시대를 열겠습니다.</p> <p>② 초등학교·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국비 50%, 시비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li> <li>- 식재료는 인천의 강화·옹진등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겠습니다.</li> </ul> <p>□ 예산 및 조달 방안</p> <p>○ 교육지원예산 1조원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이월액, 불용액 축소, 미수납 적극 징수, 시유재산 수입 극대화,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도시 축전 폐지, 자전거도로 사업 재조정, 도개공 방만 경영 혁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하여 최소 4년간 총 2조4천억원 절감하여 이 중 3,700억원을 교육지원 예산으로 확보</li> </ul> <p>○ 초등학교·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1,502억원 (국비 751억원, 시비 751억원)</li> </ul>
--



## <참고-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후보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1

친환경 무상급식

○ 추진배경

-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육기본권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됨

○ 목 표 : 단계적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이행절차

단계별(연도별)	무료급식 대상	대상 학생수
1단계('11년)	초등/특수	106,464
2단계('12년)	초등/중/특수	164,965
3단계('13년)	초등/중/고/특수	221,845

○ 이행기한

- 1단계 : 2011년 - 2단계 : 2012년 - 3단계 : 2013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전체 소요예산

단계별 (연도별)	소요예산(원)		
	총계	교육특별세	자치단체
1단계('11년)	49,665,456,000	24,832,728,000	24,832,728,000
2단계('12년)	76,956,172,500	38,478,086,250	38,478,086,250
3단계('13년)	103,490,692,500	51,745,346,250	51,745,346,250

- 재원조달방안: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예산의50%를 매칭하여 추진

○ 기타

- 2010년 도교육청 전체 예산 1조 8천 8백 8십 5억

- 1단계 : 248억 (전체 예산중 차지하는 비율 1.3%)

- 2단계 : 385억 (전체 예산중 차지하는 비율 2%)

- 3단계 : 517억 (전체 예산중 차지하는 비율 2.7%)

(\*위 후보 공약 출처-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자료실)

### 3)친환경무상급식 정책 추진상의 한계

- 지역별편차, 예산분담 논란, 급식센터설치 미흡, 민관 정책공조 부족이 나타남.
- 대구, 울산, 부산, 대전, 경북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도에서 무상급식 확대 실시 중

- 즉 여전히 전국의 편차가 존재함.(대구16.6%, 전남 95%)
- 교육청, 지자체간의 예산 분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힘겨루기가 해마다 이어짐.
- 친환경급식의 경우 2010년 이후 특별한 진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단, 급식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식재료 공급 체계의 개선,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여전히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과의 정책공조 및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
-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 로컬푸드로 먹거리 생산,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지역 먹거리체계 마련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부족하며 시민단체 진영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임. (전북 완주 공공급식지원조례 제정 -2012년 12월)

<참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현황 (2013년 3월 현재)

구분	센터 설치 현황	비고
광역 센터	서울, 인천	
정책기능 중심형 센터		
1)행정직영형 센터	울산북구, 광주 남구, 횡성, 하남, 화성, 부천, 서울 5개구(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동대문구)	
2)민간위탁형 센터	시흥, 수원, 안동	
물류중심형 센터	나주, 순천, 고양, 경기, 청원, 당진, 영주, 포항, 김천, 장성, 목포, 영암	주로 농협운영
민간 설립 운영형 센터	여주, 원주, 옥천	
민간위탁, 행정감독 결합형 센터	아산, 익산	

<참고> 2013년 3월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현황(출처-김춘진 의원실)

시도	전체학교수				무상급식학교수												비율 (B/A*100)
	초	중	고	계 (A)	초			중			고			합계(B)			
					전면	부분	계	전면	부분	계	전면	부분	계	전면	부분	계	
서울	597	382	318	1,297	555	0	555	0	379	379	0	0	0	555	379	934	72
부산	302	170	144	616	17	278	295	0	5	5	0	0	0	17	283	300	48.7
대구	218	123	92	433	55	0	55	16	0	16	1	0	1	72	0	72	16.6
인천	240	133	122	495	240	0	240	5	0	5	5	0	5	250	0	250	50.5
광주	149	88	67	304	149	0	149	88	0	88	0	0	0	237	0	237	78
대전	143	88	62	293	0	143	143	0	0	0	0	0	0	0	143	143	48.8
울산	118	61	53	232	52	27	79	6	0	6	0	0	0	58	27	85	36.6
세종	22	10	7	39	22	0	22	10	0	10	0	0	0	32	0	32	82.1
경기	1,188	601	447	2,236	1,188	0	1,188	454	147	601	6	0	6	1,648	147	1,795	80.3
강원	351	163	117	631	351	0	351	163	0	163	28	0	28	542	0	542	85.9
충북	259	127	83	469	259	0	259	127	0	127	0	0	0	386	0	386	82.3
충남	422	189	117	728	422	0	422	135	0	135	0	0	0	557	0	557	76.5
전북	420	208	132	760	420	0	420	208	0	208	54	0	54	682	0	682	89.7
전남	426	247	153	826	426	0	426	247	0	247	112	0	112	785	0	785	95
경북	484	279	192	955	402	13	415	206	0	206	3	0	3	611	13	624	65.3
경남	493	267	190	950	493	0	493	153	0	153	91	0	91	737	0	737	77.6
제주	110	44	30	184	110	0	110	44	0	44	0	0	0	154	0	154	83.7
합계	5,942	3,180	2,326	11,448	5,161	461	5,622	1,862	531	2,393	300	0	300	7,323	992	8,315	72.6

■ 참고-2013년 광역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계획(\* 13년도 추가지원 대상)

시-도	지 원 대 상	분담률 및 분담액			
		계	교육청	자 치 단 체	
				광역시	기초
서울	○ 초 전학년 ○ 중 1학년 * 중 2학년	100%	50%	30%	20%
		3,953억원	1,976억원	1,186억원	791억원
부산	○ 초 1~3학년 * 초 5학년	100%	84%	16%	
		939억원	785억원	154억원	
인천	○ 초 전학년	100%	30%	40%	30%
		669억원	201억원	267억원	201억원
광주	○ 초 전학년 ○ 중 1학년 * 중 2~3학년	100%	55%	40%	5%
		969억원	534억원	383억원	52억원
대전	○ 초 1~4학년 * 초 5학년	100%	20%	60%	20%
		297억원	59억원	179억원	59억원
강원	○ 초 전학년 * 중 전학년	100%	63%	18.5%	18.5%
		924억원	582억원	171억원	171억원
충북	○ 초-중 전학년	100%	50%	20%	30%
		933억원	468억원	186억원	279억원
충남	○ 초 전학년 ○ 먼 지역 중학교 * 읍 지역 중학교	100%	40%	24%	36%
		904억원	361억원	217억원	326억원
전북	○ 농산어촌 : 초-중	100%	58%	21%	21%
	○ 도시지역 : 초-중	833억원	477억원	178억원	178억원
전남	○ 초-중 전학년	100%	52%	24%	24%
		1,162억원	610억원	276억원	276억원
경남	○ 군 지역 : 초-중-고	100%	30%	30%	40%
	○ 도시지역 : 동 초 4~6학년 * 동 초 1~3학년	1,406억원	422억원	422억원	562억원
경북	* 읍면 초-중	100%	50%	6%	44%
		244억원	122억원	15억원	107억원
제주	○ 유치원	100%	50%	50%	
	○ 읍면(초-중), 동(초) * 동(중 2~3학년)	292억원	146억원	146억원	

- ▶ 경기도 : 도는 우수식자재비(400억), 무상급식은 교육청,시군 자율시행(약7,500억)
- ▶ 울산시 : 시는 미지원, 동구-북구 초등 6학년 등 일부 시행
- ▶ 대구시 : 저소득층 위주 지원(차상위 200%)

#### 4) 국민 먹거리 의제로 범위 확대

-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급식운동 진영에서는 더 진전된 먹거리 운동을 고민하기 시작함.
- 농업농촌의 위기 심화,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으로 먹거리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대안 마련이 절실했음.
-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2011년 전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함.
- 지역 차원에서는 원주, 옥천, 완주 등 로컬푸드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과 논의가 확산되었으며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광역차원의 조례(2012년 12월)가 제정됨.

<참고> 로컬푸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12년 12월 현재)

법규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2-12-31	경제통상국 농산유통과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9-22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2-31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	2012-07-16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2-17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5-02	농업기술센터 지평선마케팅과
완주군 와일드 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1-04-07	문화관광과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10-28	농촌활력과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2-27	기획감사실
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2011-10-20	친환경농업과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11-05	농수산물국 식품유통과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12-12-14	친환경농정과
청송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5-02	농업기술센터

-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요구안 제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기획하는 등 노력을 기울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 로컬푸드로 의제를 확대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식량주권, 먹거리복지, 국민 건강권 보장 등)을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기초농산물 구매제 등 정책 대안을 명확하게 하였음.

<참고> 2012 대선 먹거리·농업 정책 요구(안) 4대방향 · 6대요구 · 16대 과제

## 1. 4대 방향

- ① 식량주권의 확립과 국민 먹거리기본권의 보장
- ②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실현 및 농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
- ③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 실현

## 2. 6대 요구

- ① 국내 식량자급율의 제고
- ② 대통령 직속의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국민먹거리기본법·국가식량보장법의 제정
- ③ 국가재원에 의한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시행 및 공공급식으로 확대
- ④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수매, 계약재배를 통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의 시행
- ⑤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의 강화 및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 ⑥ 농촌복지의 최저 기준 마련,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등 농민의 삶의 질 향상

## 3. 16대 정책과제

- ①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
  - 임기말(2017년)까지 국내 자급률 5%p 제고
  -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 및 식량자급률 5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식량·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기초 곡물에 대한 수매 비축제 실시
- ②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
  - 국가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 단위 공공 조달시스템으로 전면 확대
  -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업과 연계를 통한 안전한 식재료 조달
- ③ 공공급식으로 확장, 먹거리의 보편적 복지 실현

- 학교급식, 소외계층, 공공기관 등 1,600만명의 공공급식으로 확대
-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소비 연계로 농업 회생의 토대 마련
- 공공급식을 통합 추진할 지원센터 설치,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 확대
- ④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의 강화
  -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전예방의 원칙 확립
  - 수입 농축산물 검사 및 검역주권의 확보
  - GMO표시제 등 먹거리 안전관리체계 강화
- 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중FTA 협상 중단, 한미FTA 폐기
  - 한중 FTA중단, 식량안보·에너지·자원협력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
  - 한미FTA의 폐기
- ⑥ 주요 농산물의 가격과 농가소득안정 종합대책 마련
  - 주요 농산물 정부 수매와 계약재배를 통해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의 시행
  -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접지불제도 시행,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로 전환
  - 식량안보, 환경보전, 유기농업 등 특수 목적의 추가 직접지불제 시행
- ⑦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 유기농 및 친환경농업 비율목표 확대 및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친환경인증(면적기준) 비율 2020년까지 30%로 확대
    - 지역단위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제 도입을 통한 민간주도의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 민간차원의 토종 및 유기종자 연구개발 지원 및 활성화, 이를 위한 토종종자 육성법 제정
- ⑧ 여성농민과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조건의 마련
  -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으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개선 및 여성농민 전담 정책 부서 부활
  - 여성 농업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의 마련
  - 농촌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⑨ 자연재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의 구축
  - 재해보상제도의 도입, 재해보험제도 강화로 농업생산의 지속성 보장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자, 작부체계, 재배기술 등 전반적인 농업생산시스템의 재정립

- 10 농촌복지의 최저 기준 마련,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등 농민의 삶의 질 향상

  - 영세농가, 고령농가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현실화, 선정대상 확대
  - “우리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등 농촌지역 건강관리시스템 혁신
  - 농촌지역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농어촌교육 혁신을 위해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 산업재해에 준하는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 11 먹거리 공급의 기반인 농지보전의 강화

  - 식량자급률 목표를 기준으로 한 농지보전 목표의 수립
  - 농지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
- 12 한반도 공동의 식량주권 확보

  - 대북 쌀지원 재개 및 남북 농업교류협력 강화
  -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으로 한반도 공동의 식량주권 기반 마련
- 13 귀농 귀촌 활성화로 농촌 공동체에 활력 제공

  - 농촌공동체와 귀농 귀촌을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활성화
  - 신규 취농자에 대해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소득 지원
  - 농어촌에 근무할 공무원, 교사, 의사 등 별도 채용 제도 도입
- 14 농민과 국민이 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주체로

  - 정부, 국민, 농민 대표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 설치하여 올바른 거버넌스 구현
  - 식량주권, 먹거리 기본권, 농정 기조 등에 관한 사회협약 추진
  - 국민먹거리기본법, 국가식량보장법 등 농업·먹거리 관련 법령과 제도 및 기구 재정비
  - 농어업회의소 등 안정적인 농정 협치체계 구축
- 15 농업과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개혁

  - 현행 지주회사 중심의 신경분리 전면 재검토
  - 품목별 연합회 중심의 경제사업 체제로 전환
  - 2015년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시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추진
- 16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농촌공동체의 활성화 및 인적역량 혁신

  - 마을 주민 자율적인 마을 공동체 추진 지원
  - 중소 가족농 중심의 생산 공동체 지원 강화
  -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농촌 리더 중점 육성 프로그램의 시행



### 3. 지난 3년 친환경무상급식 평가 및 과제

#### 1) 성과 및 한계

##### <성과적 측면>

-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성과가 도출됨. 이제 무상급식은 대세가 되었음.(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아직 남은 숙제임)
-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주체인 친환경생산자 조직이 결성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함.
- 도시농업 지원 조례 제정, 로컬푸드 조례 제정 등 관련된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한계적 측면>

-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책임 회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져 가고 있으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양적,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다양한 가치가 담긴 정책으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시민진영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함.
-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라는 성과가 급식운동의 활성화라는 과제와 연계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함.
- 국민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설정한 것은 성과이지만 지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함께 추진할 핵심 사업을 공유하고 추진하지 못한 것은 명확한 한계였음.

#### 2) 향후 핵심 과제

-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과를 1단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먹거리 운동을 추진할 준비를 하여야 함.

-무상급식 정부 재정분담, 급식센터 의무 설치 등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먹거리운동의 과제 및 목표 설정

-학교급식운동 동력 평가를 통한 지역 단위 먹거리운동 주체 형성, 활동가 양성

### 3) 2013년 특징적 과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먹거리 문제를 선거 의제하기 위한 준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 설정하여 국민적 운동 전개

-지방선거 후보 공약화 요구 등 전국적인 선거 대응 방법 제시

#### 4. 첨부-시도별 친환경무상급식 평가(서울,인천,대전,경남, 타시도 자료 수집중)

	서울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1.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광노현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청, 기초지자체 무상급식 지원 초등학교 1-3학년 지원 시작(오세훈 서울시장 거부)</li> <li>•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 함께 지원 시작 (초 1-6학년)</li> <li>• 2012년 초1-6년, 중1년 무상급식 지원 확대</li> <li>• 2013년 초1-6년, 중1-2년 무상급식 지원 확대</li> <li>• 2014년 초, 중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 확대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2300억원</li> <li>• 2012년 2876억원</li> <li>• 2013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청 1976억원(50%)</li> <li>-서울시 1186억원(30%)</li> <li>-자치구 791억원(2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노현(교육감)-오세훈(시장)에서 문용린-박원순 체계로 변화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예산 분담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 공조는 미흡한 상황임.</li> <li>• 광역 통합급식센터 설치로 형식적인 업무 협조는 진행되나 한계가 많음</li> </ul>	
	서울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2. 기초지자체와의 정책공조 및 재원분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지자체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공조 진행중임.</li> <li>• 예산분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5:3:2 비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서울시 지원 거부, 하반기부터 시작</li> <li>•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원 분담 이뤄짐</li> <li>• 2013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이후 무상급식 재원 분담은 이뤄지고 있으나 협력 체계는 미흡함.</li> <li>• 자치구의 경우 급식 정책 사업이 전무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함.</li> <li>• 자치구 5개 센터의 설치로 향후 정책 공조 사업이 기획, 추진되어야 할 것임.</li> </ul>	

	서울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3. 급식지원센터 설치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9월 서울시 광역친환경 급식통합지원센터 설치,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작.</li> <li>•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동대문구 5개 기초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중임.</li> <li>• 광역, 기초 급식 센터 역할분담, 업무협의 진행중임.</li> <li>•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산하 친환경유통센터(2009년 3월 시범사업 시작)를 통해 친환경농축산물 공급중임.(2012년 말 현재 769개교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li> <li>• 2012년</li> <li>• 2013년</li> </ul> <p>광역센터 약 10억원(사업비) 기초센터 성북 118백만원(인건비포함) 은평 46백만원(인건비별도) 노원 20백만원(인건비별도) 서대문 24백만원(인건비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급식식재료 공급이 확대되어 옴.</li> <li>• 광역통합센터와 유통센터간의 역할분담, 정책공조, 지도감독은 아직 미흡한 단계임.</li> <li>• 향후 통합급식센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li> <li>• 자치구의 센터 설치움직임이 매우 미흡함.</li> <li>• 이 때문에 현장 체험 등 식생활교육, 식재료 공급체계의 개선 등은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li> <li>• 향후 25개구에 급식센터 설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li> <li>• 광역, 기초, 유통센터간 업무분담, 협조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연구 및 토론이 필요함.</li> </ul>	
	서울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4. 친환경무상급식추진관련 시민단체와의 협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교육청 자문회의</li> <li>• 서울시급식심의위원회</li> <li>• 서울시광역급식센터 운영회의에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교육청 자문회의와 서울시 급식심의위원회의는 형식적인 운영임.</li> <li>• 광역급식센터 운영회의는 월1회 개최되고 있으며 사업계획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li> <li>• 센터가 설치된 자치구의 경우 운영위에 시민진영이 참여하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은 거의 시민단체와의 협의 구조가 없는 상태임.</li> </ul>	
	서울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5. 로푸드, 공공급식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추진 계획 없음</li> </ul>		서울시차원에서 서울시 식품종합 계획 연구 용역 정도를 추진함.	

	대전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1. 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초1~2학년</li> <li>• 12년 초1~4학년</li> <li>• 14년 초1~6학년</li> <li>• 시 178억, 자치구 60, 교육청 69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무상급식298억 (초등1~5학년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의 공약은 중3까지이었으나 교육청의 협조 미비로 초6학년까지 마무리함.</li> </ul>	
	대전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2. 기초지자체와의 정책공조 및 재원분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분담 시 60%, 5개 자치구20%, 교육청 20%</li> </ul>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초등 전체 + 중1까지 57억원 (시 46, 구11) 8:2 매칭임</li> </ul>	
	대전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3. 급식지원센터설치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의 경우, 2009, 2011년도에 시도했으나 무산되었고 현재는 설치 안하기로</li> <li>• 유성구 급식지원센터를 추진 중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대전시의 경우 무산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성구의 경우는 센터관련 용역까지 마쳤으나 임기 말과 예산문제로 후속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아 어려움.</li> </ul>	
	대전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4. 친환경무상급식추진관련 시민단체와의 협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개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느슨한 연대체임</li> <li>• 실무 간사가 연락만 할 뿐이고 집행력이 많이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교조대전지부의 경우, 전임자 중에서 1명이 맡아서 하기로 함.</li> <li>• 유성구의 급식지원센터 설치운동이 담보 상태로 협의구조가 정체 상태임</li> </ul>	
	대전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5. 로컬푸드, 공공급식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로컬푸드 연구회가 사전모임이 있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으나 로컬푸드나 공공급식 추진의 전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ul>	

	인천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1.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학기 초등학교 3~6학년 무상급식 실시, 2011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li> <li>• 2010 지방선거공약은 2013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였으나, 2013년 현재 초등학교만 무상급식 실시되고 있음.</li> <li>•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온 차액지원 사업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무상급식 572억원,(단가 2천원) 우수농산물차액지원 52억원(초등 167원)</li> <li>• 2012년 무상급식 669억원(단가 2,140원), 차액지원 65억원(초등 120원)</li> <li>• 2013년 무상급식 669억원(단가 2,350원), 차액지원 62억원(초등 104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순조롭고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음.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와 우수농산물차액지원 학부모 부담 해소는 시장과 시의회 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성과임.</li> <li>• 그러나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실행은 현상유지 수준에서 진행되며, 의식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함.</li> <li>• 그 결과 2012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인 2013년도 급식지원비 인상안이 시 예산담당부서에서 삭감되고, 시의회에서도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함.</li> <li>• 예산문제는 시장과 시의회의 관심과 의지 부족으로 시민사회, 학부모와 공무원이 대립하는 양상이며, 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진행될 공산이 높음.</li> </ul>	

	인천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2. 기초지자체와의 정책공조 및 재원분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시 사업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와 공조가 원만하지 않지만, 인천시 계획이 수립되면 기초지자체는 무난히 수용함.</li> <li>• 2011년 무상급식 분담률이 시, 군구, 교육청 30:40:30이었으나 2012년부터 40:30:30으로 조정 시행</li> <li>• 일부 기초지자체는 무상급식 예산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li>•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은 시와 군구가 40:30:25(학부모자부담), 초등은 55:45분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무상급식 572억원 시 172억원, 군구 228억원, 교육청 172억원. 차액지원 52억원 시 40%, 군구 35%, 학부모 25%, 2학기부터 초등 학부모자부담 해소</li> <li>• 2012년 무상급식 669억원 시 267억원, 군구 201억원, 교육청 201억원 차액지원 64억원 시 31억원, 군구 26억원, 학부모 7억원</li> <li>• 2013년 무상급식 669억원 시 267억원, 군구 201억원, 교육청 201억원 차액지원 61억원 시 29억원, 군구 25억원, 학부모 7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시 30, 군구 40, 교육청 30 분담률을 40:30:30으로 변경하여 군구의 불만을 해소함.</li> <li>• 급식지원센터 및 식재료 공공조달 문제를 두고, 시는 군구의 실행 역할을, 군구는 시의 초기 계획수립과 재정 지원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역할 조율의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임.</li> <li>• 교육청이 우수농산물차액 지원 등 친환경급식 관련 사업실행에서는 빠져 있어 시와 공조가 없음. 이에 대해 교육감 및 교육청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 필요함.</li> </ul>	
	인천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3. 급식지원센터 설치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0월 조례 통과 (2012년 7월1일 설치 명시)</li> <li>• 2012년 7월 이름뿐인 급식지원센터 설치</li> <li>• 2013년 3월 교육기획관실 산하 급식지원팀 구성 (이 팀을 대외적으로 급식지원센터라 칭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li> <li>• 2012년</li> <li>• 2013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하였고, 현재 그 공약을 실행하였다고 자평함.</li> <li>• 강한 반대에 의해 의도대로 센터 관련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보다 못한 내용임.</li> <li>•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집행할 의지가 재확인 및 재정리되어야 함.</li> <li>• 센터 등 공급체계 관련해서 ‘생산자를 위한 개선’의 의미로 수용되고 있으며, ‘학생을 위한 개선’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li> </ul>	

	인천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4. 환경상식진련민체의의 환무급추관시단와협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식기구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와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음.</li> <li>양 기구 모두 시민단체, 생산자단체와 학교, 학부모 단체 대립 구도로 생산적인 협의 안 됨.</li> <li>기타 공무원과의 협의는 외형적으로 이루어지나 실 내용은 거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형적으로 공식, 비공식적인 채널은 열려 있으나, 협력적인 관계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은 없음.</li> <li>시민·생산자단체와 급식업체·학교운영위원협의회의 대립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기조를 잡지 못해 시가 수동적인 태도임.</li> <li>이로 인해 시와 시민단체 간 합의와 번복을 되풀이하는 양상이 나타남.</li> <li>분명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지 않는 한 민관협력에 의한 급식정책 추진은 어려움.</li> </ul>	
	인천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5. 로컬푸드, 공공급추현 컬드, 공식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컬푸드 조례 추진을 위한 간담회 1차례 개최.(시의원 주관)</li> <li>보육시설, 유치원급식에 대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일부 접근(공동구매 추진)</li> <li>시 차원의 계획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차원에서 로컬푸드, 공공급식 관련 진행되는 바는 없음.</li> <li>중앙정부의 로컬푸드 지원정책에 따라 농축산유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생산자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li> <li>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하여 제시하여야 함.</li> </ul>	



○ 경상남도과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현황

- 2010년 6월 지방선거 : 경남지사 김두관 후보 당선 (무소속 → 이후 민주당 입당 → 대선 후보 출마로 도지사 사퇴) 경남교육감 고영진 후보 당선 (전 교육감)
- ※ 2010년 6월 지방선거시 정책공약 : 경남지사 김두관 후보와 학교급식경남연대간의 학교급식 정책공약 체결함
- ※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선거 : 홍준표 후보(새누리당) 당선
- 2010년 8월 경남도지사 - 경남도교육감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협의 및 체결 : 2014년까지 로드맵 구축
- ※ 2011년 ~ 2014년 로드맵 내용 - 표 1. 참조바람

<표 1. 2014년까지 경남 친환경무상급식 로드맵 내용>

	11년	12년	13년	14년
추진 방향	학교급식법 및 교과부 방침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 초·중·고 와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우선 실시하 고, 도시지역 초·중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함			
추진 목표	2014년까지 도시지역 중학교까지 연차적 확대			
지원 금액	684억원(1,479억원)	1,221억원(2,016억원)	1,534억원(2,329억원)	1,941억원(2,736억원)
지원 실적	545개교 175,955명(36%)	580개교 265,936명(54%)	759개교 318,868명(68%)	미 정(85%)
재원 분담	경남도 : 교육청 : 시·군 181억원 : 230억원 : 273억원	경남도 : 교육청 : 시·군 366억원 : 366억원 : 489억원	경남도 : 교육청 : 시·군 460억원 : 460억원 : 614억원	경남도 : 교육청 : 시·군 582억원 : 582억원 : 777억원
내 용	군지역 : 초·중·고 시지역(읍면) : 초·중 저소득층 : 초·중·고	군지역 : 초·중·고 시지역(읍면) : 초· 중·고 시지역(동) : 초등(4~6 학년) 기타지역 : 저소득층	군지역 : 초·중·고 시지역(읍면) : 초· 중·고 시지역(동) : 초등(1~6 학년) 기타지역 : 저소득층	군지역 : 초·중·고 시지역(읍면) : 초·중· 고 시지역(동) : 초·중 기타지역 : 저소득층
비 고	1. 지원금액의 ( )는 급식운영경비(인건비 +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급식운영경비는 도교육청에 서 전액 지원함  따라서 지원금액은 식품비이며, 재원 분담은 경남도 : 경남도교육청 : 시·군 = 30% : 30% : 40% 지 원함			

	경상남도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1.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학교급식 로드맵 구축</li> <li>• 2011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실시 (이전 김태호 지사 약 50여억원 지원함)</li> <li>• 2011년, 2012년 새누리당 도의원 및 현 홍준표 지사 예산 삭감 시도함</li> <li>• 2011년부터 창원시, 양산시, 거제시, 진주시 등 기초지자체 재원 분담 비율 조정 강하게 요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 180억원</li> <li>• 2012년 : 357억원</li> <li>• 2013년 : 422억원</li> </ul> <p>※ 물가 상승비율 포함 금액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두관 지사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기본인식과 철학을 공유하고, 로드맵을 구축한점은 상당한 성과로 여겨지나, 도중 사퇴로 인해 모든 정책이 무의미해짐</li> <li>• 더불어 2014년 급식지원비는 로드맵에 의해서가 아닌, 홍준표 현지사에 달려있음(실제 2012년 하반기 2013년 예산 삭감 시도가 있었음)</li> </ul>	

	경상남도교육청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1.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권정호 전 교육감 친환경무상 급식 정책협의 및 &lt;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gt; 발족.</li> <li>• 2008년 ~ 2010년 경남도교육청 주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실시</li> <li>• 2010년 고영진 교육감 학교급식 로드맵 구축</li> <li>• 현재 급식운영경비+식품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 222억원</li> <li>• 2012년 : 357억원</li> <li>• 2013년 : 422억원</li> </ul> <p>※ 물가 상승비율 포함 금액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고영진 교육감은 후보시절 친환경무상급식에 부정적 입장이나, 무상급식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임</li> <li>• 그런 의미에서 김두관 지사와 학교급식 로드맵을 구축한 것은 의미있음. 단, 언제든 입장 선회할 수 있음</li> </ul>	

	- 시·군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2. 기초지자체와의 정책 공조 및 재 원분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각 시·군의 사정과 정책에 따라 다름</li> <li>2010년 기준 도내 10개 군은 초·중·고 모두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실시함</li> <li>2011년부터 창원, 양산, 진주, 거제 등 의 도시 중심 재원 분담 비율 재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갈등 분쟁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 268억원</li> <li>2012년 : 477억원</li> <li>2013년 : 562억원</li> <li>※ 물가 상승비율 포함 금액 책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수가 적은 군 또는 시지역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에 적극 동의함</li> <li>단, 학생수가 많은 도 시지역에서 재원분담 비율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li> <li>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단체장의 철학 부재와 의지 빈곤이 주</li> </ul>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3. 학교급 식지원센터 설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11월 : 거창군 센터 설립</li> <li>2012년 3월 : 통영시 센터 설립</li> <li>합천군, 함안군 : 2008년, 2011년부터 친환경 식자재 직거래 공동구매</li> <li>※ 조속한 시일내 센터 전환 추진중</li> <li>2012년 ~ 현재 : 김해시, 사천시, 창원시, 창원군, 하동군 등 관계기관 (지자체, 의회 등) 및 생산자 - 시민 단체 센터 설립 협의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 거창군 -도비:10억원 군비: 8억원</li> <li>2012년 : 통영시 -국비:10억원 시비 : 5억원 자부담:7억원</li> <li>2013년 : 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거창군 및 통영시의 경우 그 내용은 위탁 운영임 (거창원예농협/경남예향복지회)</li> <li>실제 센터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음</li> <li>김해는 센터의 성격과 관련 1년여간 표류하고 있음</li> <li>경남도의 경우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후 경남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임</li> </ul>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4. 친환경무상 급식 추진 관 련 시민단체와 의 협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 : 학교급식경남연대 등</li> <li>거창 : 학교급식거창연대 등</li> <li>통영 : -</li> <li>합천 : 합천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 및 합천시민-농민단체 등 (합천군 - 교육청 지원)</li> <li>함안 : 함안친환경안전농산물영 농조합 및 함안시민-농민단체 등 (함안군 - 교육청 지원)</li> <li>김해 : 김해교육연대 등</li> <li>사천 : 사천친환경영농조합 및 사천학교급식운동본부 등 (사천시 - 교육청 지원)</li> <li>창원 : 학교급식경남연대 직할</li> <li>창녕 : 그린나래영농조합 등</li> <li>하동 : 지리산친환경벤처농업협 회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거창군과 통영시의 센터 설 립 및 운영은 단체장의 철학 및 의지 부족과 관련 공무원들의 위탁운영 선 호 등이 결합되어 큰 성과를 내지 못 함</li> <li>김해시의 경우 1여년의 기간 동안 가장 모범적인 협치 모델을 만들어 내는 등 일정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실무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의 위탁 선호 입장 등으로 현재 센터 설립 지 연되고 있음 (내년 김해개발공사 설 립시 개발공사 산하에 센터 설립 예 정임)</li> <li>사천시의 경우 6/26 센터설립을 위한 사천시 주최의 제1차 간담회가 개최됨. 향후 각계의 급식관계자가 참 여하는 센터설립 추진위원회를 운영 할 예정임</li> <li>이 외 창원시와 창원군, 하동군 등 에서도 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생산 자중심의 시민사회 조직화 진행중임</li> <li>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공직 사회에 대한 현실적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li> </ul>	

	추진상황	예산	평가	비고
5. 로컬푸드, 공공급식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천, 함안, 김해, 창원, 사천, 거 창, 통영 등에서는 친환경지역식자 재를 직거래 공동구매 또는 센터를 통 해 공급하고 있음</li> <li>단, 통영의 경우 지역산 식자재 가 매우 부족하므로 인근 고성군 식 자재를 사용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창군의 경우 지역산 식자재를 센 터를 통해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 비 율과 품목이 대단히 낮음</li> <li>통영시는 안정적 생산체계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인근지역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음</li> <li>합천군의 경우 읍내에 로컬푸드 직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li> <li>경남 전 시·군에 학교급식 직거래 공동구매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 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실천 방안 을 모색하여야 함</li> </ul>	

## 주제발표 2

###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부흥기를 개척하자!

김현곤 사무처장(희망먹거리네트워크)

#### 1. 핵심 문제의식

어떻게 하면 먹거리 운동조직을 새롭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 먹거리 의제를 중심 이슈로 부상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14년 지자체선거를 분기점으로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부흥기를 개척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적인 고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거리에 대한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맞는 먹거리 운동의 내용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변화된 내용과 과제에 맞는 먹거리 운동의 주체를 새롭게 재편 조직해야 한다.

학교급식 운동 과정에서 창출된 성과와 경험을 살리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대중 운동 방법을 창조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맞는 먹거리 운동의 내용, 주체, 방법을 설정하고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 폭발시켜 먹거리 이슈를 지자체 선거의 중심 이슈로 최대한 부각시키고 이를 토대로 하여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부흥기를 개척해야 한다.

## 2. 국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2002년 당시 학교급식은 저질급식, 부패의 온상, 식중독사고의 진원지로 인식되어 있었다. 출산율이 낮은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친환경 급식의 요구가 높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속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덜어 주는 무상급식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운동이 학교급식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이런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아이들의 건강과 농촌, 농민의 어려움도 들어주자는 대의명분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10년의 학교급식운동의 성과로 이제 학교급식이 우리사회 전체 먹거리의 질로 보면 상급의 먹거리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직영급식이 대세가 되었고, 학교급식이 절박하게 투쟁해야 할 사안이라기 보다 좀더 잘 뿌리내려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지지하는 사안이 되었다. 학교급식에 국가예산 50% 투입,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착등에 대해 국민은 지지하고 박수는 보내지만 절박하게 투쟁과 운동에 나서야 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반면에 사회 전체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GMO, 화학적 합성첨가물, 방사능 등을 일상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사회구조에 깜짝 깜짝 놀라고 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먹는지 알고나 먹자는 것이 국민의 절박한 요구이다. 먹거리에 대한 정보의 민주적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노력나가고 시장에서 점차 나쁜 먹거리를 추방해 나가겠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알고 있기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업체와 보수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있기에 불량식품 근절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양극화가 극에 달하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고아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먹거리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다. 먹거리 정보가 공개되어도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심각한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이런 먹거

리의 양극화는 건강이상과 의료비증가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중산층에게는 심리적 부담감, 도덕적 부담감을 가지게 만들 것이다. 먹거리 정의, 먹거리 평등을 실현하는 문제가 중요한 국민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다.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는 지구 환경,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성, 국가의 식량주권, 인간성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한 먹거리는 지구 생태 환경을 건강하게 하고 나쁜 먹거리는 환경을 파괴한다. 건강한 먹거리는 농업과 농촌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며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시킨다. 건강한 먹거리는 국가 식량주권의 토대이며 더 나아가 현대사회 파괴되어 가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게 한다. 귀농 귀촌, 도시농업의 활성화, 로컬푸드 등의 바람은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 국가, 도시와 농촌, 공동체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시대 추세이다.

### 3. 국민의 요구에 맞는 먹거리 운동의 내용

학교급식 운동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위탁급식 등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막고 국가예산 50% 투입과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국민들이 투쟁하고 거리로 나서야 되는 절박한 요구라기보다 과거회귀 반대하며 지지하고 박수치는 정도의 사안일 수 있다. 이에 맞는 수위와 방법으로 학교급식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급식에서 GMO, 화학적 합성첨가물 등을 추방하기 위한 좀 더 깊이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GMO, 화학적 합성첨가물, 방사능 등의 문제는 의무표시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있게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운동, 법과 제도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례, 법 제정운동 등을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전개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을 넘어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실현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창의적인 시도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먹거리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노숙인, 결식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는 복지 예산과 공급구조를 요구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학교급식 영역에서 더 나아가 유아, 노인, 장애인, 노숙인과 결식아동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일례로 서울시 결식아동 숫자가 5만명이 넘는다. 결식아동들에게 공급되는 먹거리 실태를 조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복지예산 중 먹거리 공급에 사용되는 예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 구조와 이를 복지기관이나 개인이 착복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로컬푸드와 계약재배, 현물공급을 통해 농민과 지역경제도 살리고 먹거리 정의도 실현하는 구체적인 창조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해 로컬푸드를 확대 정착시켜 소농과 농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각종 복지사업과 로컬푸드 사업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을 개선시키며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

생활 곳곳에서 창조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새로운 먹거리 운동을 대중화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평하고 정의로운 먹거리,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 사회단체,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연대하고 협력하여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조례, 정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생활 곳곳에서 벌이는 창조적인 먹거리 운동을 국가예산 50% 투입 학교급식법 개정, 먹거리 기본조례, 먹거리 기본법, 먹거리 기본계획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제도화 운동으로 모아 나가야 한다.

지역별 부문별로 특성에 맞는 운동 내용과 방식으로 일상적인 사업과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활동들이 예산, 조례, 법, 정책으로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모아나가



야 한다.

당면해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과 공약화, 식품위생법 (GMO 의무표시) 개정이 주요한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먹거리 기본법과 국가 지자체 차원의 먹거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4.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를 확대 재편하여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주체 조직을 만들자!!!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내용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과 함께 그 운동에 이해와 요구를 가지는 정당, 사회단체 및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조직하여 운동의 주체를 새롭게 재편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하자는 운동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떠나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이었으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보편적복지, 선별적 복지 논쟁으로 끌고 가 과도하게 대립선을 그어면서 스스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 운동이 진보진영의 운동인 것처럼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 된 면이 있다.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정의롭고 평등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희망먹거리 운동을 계속 배타시한다면 더 큰 정치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진보와 야당중심의 운동에 스스로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을 넘어 새로운 먹거리 운동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조직을 중심으로 정당, 사회단체, 이해관계자, 개별인사 등 먹거리운동에 관심과 요구를 가지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 먹거리 운동의 중심 조직을 새롭게 확대 재편하자.

지역별 특성과 역량에 맞게 여야 정당, 진보 보수 단체, 다양한 먹거리 관련 사회단체, 건강한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과 폭넓게 소통하여 “가칭)희망먹거리 국민연대”로 조직을 확대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들과 적극 협력하여 민관협치 조직의 성격을 가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역먹거리위원회, 지역먹거리센터 등의 조직을 만들고 확대 발전시

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더 나아가 가정희망먹거리 국민연대, 지역먹거리센터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조직 구상을 실현하자.

## 5. 운동 방법

학교급식 운동의 경험을 살려 우리가 제일 잘 할수 있는 운동방식은 주민발의, 의원발의 등의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합법적인 대중운동 방법으로 시대의 흐름에도 맞고 서명운동과 교육, 홍보 등을 결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방식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성에 맞게 먹거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양하고 폭넓게 취합하여 분석하고 올바른 먹거리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먹거리에 대한 전문가 인력풀을 적극 조직하여 정보와 자료를 취합 집중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강연, UCC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후원조직 육성 사업을 벌여야 한다.

노숙인, 노인 등의 식사제공, 고아원, 양로원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특히 정의롭고 평등한 먹거리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계도 함께 나누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자. 이런 봉사 활동속에서 복지 예산의 확충과 로컬푸드의 결합 등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자.

먹거리 운동을 제도화시키고 제도화된 먹거리 예산과 사업을 민관협력 기구나 조직을 만들고 일상적인 사업과 재정,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노력을 배가시키자. 형식적 민주주의가 전진하고 합법적인 지자체 정치공간이 열려있는 조건에 맞게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정당들과의 소통과 협력체제를 특성에 맞게 구축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역먹거리센터 등의 민관협치조직 건설 운영에 박차를 가하자.

언론과 방송을 적극 활용하자. 지역언론과의 공동 토론회, 지면대담, 먹거리칼럼, 기

고 등을 다양하고 꾸준히 진행하자. 언론과 방송, 정치인들이 함께 먹거리 운동의 제도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토론회 등을 펼치고 토론회의 성과물이 제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

이밖에도 시대의 흐름과 지역 부문별 특성과 수준에 맞는 창조적인 운동방식을 개발해 내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자. 이를 위해서는 먹거리 운동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조직적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6. 기본흐름

- 학교급식법 개정, 식품위생법 개정을 2013년 당면 과제로 설정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 먹거리 기본법 제정은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되 지금부터 준비하여 2014년 지자체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실현해 나간다.
- 먹거리 기본조례는 지금부터 (안)을 만들어 2014년 지자체 선거의 핵심내용과 공약으로 외화시킨다. 풀뿌리국민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녹색당이 초동주체가 되고 이에 함께하는 광범위한 주체를 조직한다.
- 지자체 선거 먹거리 정책공약은 2010년 지자체 선거 공약 평가와 지역별, 부문별 제안을 조사 수렴하고, 허남혁 박사가 외국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공약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뽑아본다. 이를 종합하여 보완 토론 정리한다.
- 당면하여 6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먹거리 기본조례, 지자체 선거 정책공약 제안 등을 결합하여 2014년 6월 지자체까지 밀고 간다.
- 2014년 6월 지자체 선거 이후 먹거리 기본조례 실현, 정책공약 실천을 강제하면서 준비된 먹거리 기본법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론화시키고 2016년 4월 총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이슈화시킨다.
- 2017년 대선에서는 먹거리 기본법과 국가식품계획에 대한 대선 정책공약도 제안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 7. 마치며

“국민의 요구와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부흥기를 개척하자”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극히 시론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학교급식 운동과 먹거리기본권 보장 운동이 어떻게 결합되어 먹거리 운동의 새로운 내용과 방식으로 뿌리내릴지 하는 것은 순전히 풀뿌리 국민연대 활동가들의 몫이다.

학교급식 운동에 대한 성과적인 평가와 현시기 국민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맞는 운동내용과 방식을 창조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1.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위한 6월-9월 사업계획

### 1.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둘러싼 상황

#### 1) 급식업자와 보수세력의 반격 태세

- 친환경 무상급식을 저질급식, 정치급식, 공교육 예산 압박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 학부모와 학교의 자율 선택권을 내세우며 위탁급식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자들의 집요한 로비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 5월 23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한국교총 등이 주최하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가세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평가 토론회 진행(\*\*관련 홍보 자료 참조)

#### 2) 국회 논의

- 민주당이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추진중이나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 새누리당은 그 동안에는 국가예산 50% 투입에는 반대해 왔으나 학교급식지원센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최근 김세연 의원이 5/23일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참조하면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에 반대하는데서 더 나아가 학교급식법을 오히려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은 말 그대로 전면개정안이므로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학교급식법 부분개정안과 병합심리 되지는 않는다. 전면개정안은 상임위가 주관하는 대중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의결,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에는 학교급식의 목적과 기본원칙, 적용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문제,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의무 설치, 국가예산 50% 확보등의 주요 과제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핵심과제인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의무 설치와 국가예산 50% 확보 문제등이 담겨있다. 학교

급식법 개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내야 2014년 학교급식예산에 국가예산 50%를 반영할 수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 단계 더 전진시킬 수 있다.

-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통과가 중요 분기점이 될 것이며, 그 시점은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의와 상임위에서 기초 논의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 될 것이다.

### 3) 급식운동 진영

-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정착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했고, 공공급식 확대의 발판을 만들었다. 학교 밥은 짬밥이라는 비아냥을 털어내고 학교밥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맛있고 건강한 밥상이라는 인식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 평가 사업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 향후 과제와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통일적인 정리와 근거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성과 조사 및 분석, 자료집, 책자 발간 등 필요

- GMO와 화학적 합성첨가물 등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학교급식, 공공급식의 식재료 품질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전문가와 관련 주체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1차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농약기준은 대체로 충족했다. 그러나 가공식재료에서 GMO의 문제, 화학적 합성첨가물의 문제 등은 아직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 우리들은 1차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농약기준에서 더 나아가 가공품의 품질기준도 만들고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가공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도 추진하고자 한다.(안전학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토론회 자료참조)

-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역먹거리 체계, 먹거리 복지 등에 대한 정책과 공약, 조례(안)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적으로는 먹거리 기본권 운동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조례, 국가 정책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 진영이 반대논리와 전열을 정비하고 나서고 있는 반면에 급식운동 진영은 조금 느슨해져 있어 이를 시급히 정비하고 통일적인 대응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문제-10년의 학교급식운동을 평가하고 학교급식 운동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실천적으로 도출하고 지역별, 부문별 먹거리 운동 활성화 방법 모색해야 한다)

**식량닷컴 6월호 정왕룡 기자의 친환경 무상급식 3년 평가와 과제**

**“지역과 주민이 안 보인다” 기사내용 참조**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지방선거의 주요이슈는 단연 무상급식, 그 결과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고자 공약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진보 교육감 당선, 오세훈의 무상급식 찬반투표 이후 박원순 서울시의 당선, 그러나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연이은 패배, 보수진영의 전열재정비, 제1 야당 민주당의 정국대응능력 약화, 진보정당의 존재감 상실, 안철수 진영의 정책구상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급식의제의 기본 성격이 지방정치, 지역생활 정치 영역의 요소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중앙정치 이슈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지역에서 급식의제를 소화하고 받아안은 과정에서 어떠한 롤 모델을 만들었는지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하면 성미산과 진안군이 떠오르 듯이 무상급식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있는지? 없다. 2010년 지자체 선거 최대의 이슈는 무상급식이었고 다수의 지역에서 무상급식에 적극적이었던 지역에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역단위 롤 모델이 부각되고 있지 못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지만 문제는 무상급식이 어느 듯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복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으나 친환경 무상급식 의제는 여러 당면 현안중 하나 정도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새로운 흐름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로컬푸드 열풍,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부각되고 있다. 무상급식이 재정지출 측면만 부각되면 대중 설득력이 약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뛰어 넘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더욱 풍부화되어야 한다. 지역과 주민이 중심에 선 학교급식, 먹거리 운동이어야 한다.

## 2. 6-9월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사업의 목표

- 9월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통과 시킨다.
-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 통과에 근거하여 국가예산 50%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에 2014년 국가예산을 반영한다.
- 급식운동 진영의 전열을 정비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의 정책과 공약, 조례(안)등을 준비하는 정책적, 조직적 토대를 구축한다.

## 3. 사업의 집중기

- 8월 말에서 9월에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일정 상 공청회와 9월 정기국회 상임위원회에 맞추어서 집중해야 한다.
- 급식운동 진영의 내용적 조직적 준비를 6-7월에 마무리 짓고 여름 휴가철을 지나 본격적인 공세를 펼쳐야 한다.

## 4. 시기별 흐름과 계획

크게 3시기로 나누어 진행한다.

1시기 : 6월 임시국회

2시기 : 7월-8월 중순

3시기 : 8월말-9월 정기국회

### 1) 1시기

-6/20일 기자회견

- 임시국회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의원 질의

(2010억 예산 사용 현황과 국가예산 투입의 법적 근거로써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필요성, 급식지원 센터 현황 보고와 지원센터에 대한 입장 등등,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한 질의 요청 내용 취합하여 의원실과 협의, 질의의 방향과 결론은 학교



급식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 교육상임위 의원들과 풀뿌리 국민연대와의 간담회 추진
-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에 대한 자료집 또는 책자 준비
- 지역별 서명운동에 대한 통일적인 서명용지, 홍보물 등 제작
-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조사 설문 문항과 조사 방법, 관련 예산 확보

## 2) 2시기

- 7/5-6일 풀뿌리 국민연대 활동가 워크에서 9월 정기국회 대응 결의대회 필요
- 지역별 서명운동 선포와 추진 상황 점검
- 홍보 책자, 간담회,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투쟁 준비
-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 조사 및 분석 완료
-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 의견 조사

## 3) 3시기

- 풀뿌리 국민연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대규모 토론회
- 서명운동 1차 총화 및 전달
- 국회의원별 의견서 취합 및 기자회견
- 대중 홍보물, 홍보 책자 등 발간
- 공청회 집중 조직, 상임위 회의 방청 등 다양하게 압박
- 국회의원 회관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및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에 대한 전시회
- 최악의 경우 개악이나 무산 움직임이 있을 시 농성이나 극한 투쟁도 불사

## 참고자료2. 먹거리 기본권 보장 운동의 과제

### 1. 개념 및 용어

#### 1) 먹거리 기본권 보장 운동

- 대중운동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운동이라 칭한다.
- 먹거리 기본권속에는 건강권, 복지권, 식량주권의 세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

#### 2) 먹거리 기본 조례(안)

- 2014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당면 과제로 “먹거리 기본조례(안)”을 만들어 제안한다.
- 먹거리 기본조례(안)에는 시도군민의 건강권, 복지권, 로컬푸드의 목적과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도록 한다.
-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 품질기준(GMO, 화학적 합성첨가물, 방사능, 수입농산물 등 유해 요소를 배제하는)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먹거리 기본법

- 먹거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본법을 제정한다.
- 이를 “먹거리 기본법”이라 한다.
- 현재 존재하는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 농촌 기본법으로 분리하고 식품산업 기본법의 내용은 종합적인 먹거리 기본법으로 포괄한다.

### 2. 실천과제와 기본 로드맵

- 먹거리 기본법 제정은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2014년 지자체 선거 이후 준비하여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실현해 나간다.
- 먹거리 기본조례는 지금부터 (안)을 만들어 2014년 지자체 선거의 핵심내용과 공약으로 외화시킨다. 하승수 변호사가 초안을 제출하고 풀뿌리 국민연대에서 풍부화시켜 제안한다.

- 지자체 선거 먹거리 정책공약은 2010년 지자체 선거 공약 평가와 지역별, 부문별 제안을 조사 수렴하고, 허남혁 박사가 외국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공약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뽑아본다. 이를 종합하여 보완 토론 정리 필요
- 당면하여 6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먹거리 기본조례, 지자체 선거 정책공약 제안 등을 결합하여 2014년 6월 지자체까지 밀고 간다.
- 2014년 6월 지자체 선거 이후 먹거리 기본조례 실현, 정책공약 실천을 강제하면서 먹거리 기본법에 대한 연구와 제안, 토론을 진행하고 2016년 4월 총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이슈화시킨다.
- 2017년 대선에서는 먹거리 기본법과 국가식품계획에 대한 대선 정책공약도 제안한다.

### 3. 먹거리 기본 조례(안)

녹색당 하승수 변호사 제안과 풀뿌리국민연대 풍부화 과정을 거침

\*\*\*먹거리 기본조례 초초안 참조

### 4. 2014년 지자체 정책 공약 제안

#### 1) 외국사례 중에서 지자체 공약화할 수 있는 정책

\*\*\*허남혁 박사 아이디어 제안 메모 내용 참조

#### 2) 지역별, 부문별 지자체 선거 공약 제안 수렴

2010년 지자체 공약 평가(지역별로 평가틀에 기반하여 의견 수렴)

미진한 과제 도출 후 2014년 지자체 공약으로 제안

먹거리 기본권 운동 차원에서 새롭게 전진된 정책 공약 제안

### 3) 기타 제안

- 가공식재료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가공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추진(경기도 사례 참고)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에 기반하여 공공급식(시군청 식당, 유치원, 군립의료원, 병원, 복지관 등)의 성격이 있는 먹거리 공급체계로 확대
-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와 최저가격 보장 기금의 확보(충북 음성군 사례)
-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 활성화와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
- 학교급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체 시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안전먹거리 공급 인증식당, 누구나 쉽게 직거래에 가까운 가격으로 안전먹거리 구입체계 구축
- 유치원,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 참고자료3. 2014 지방선거 대비 지역에서의 먹거리운동 아이디어

2013. 6.24 허남혁

#### <기조>

○ 지역의 먹거리 자치: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먹거리민주주의의 제고

- 지역에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계획의 수립을 촉구함

- 특히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농업 생산산물의 안정적 공급/접근성 제고와 지원에 초점

- 지역 수준에서 생산물과 소비처의 연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촉구함(농산물 공공조달-식품현물지원)

-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촉구함

- 이러한 정책/계획수립에서 시민과 NGO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협력적, 참여적 계획)

○ 전략: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촉구

- 대도시,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광역지자체 모두 해당

- 계획 수립,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 <구체적 방안>

##### 1) 대도시(광역 이상)

○ 대도시 먹거리 계획의 수립(도시먹거리계획)

- 도시농업을 포함하여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의 전 과정에 걸친 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분야별 정책수단을 설계(민관협력, 참여적 계획) (해외 대도시들의 다양한 사례들, 서울시의 현재작업)

- 계획 수립 이전에 먹거리정책의 기초를 선언하는 먹거리 헌장(food charter)을 제정하는 방법(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사례)

- 수립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전담 상설조직의 창립(먹거리정책위원회)

## 2) 도농복합시

- 지역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로컬푸드 육성조례와 기본계획, 전담조직의 설치 요구
  -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판장/농민장터 활성화

## 3) 농촌지역

- 로컬푸드 육성조례와 기본계획, 전담조직의 설치 요구
  - 관광형, 지역활성화형 로컬푸드 직판활동 중심의 활성화 지원정책 요구
- 마을공동급식 활성화 정책 요구(조례제정 사례)
  - 농촌 영양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영양지원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목적

## 4) 광역 지자체

- 로컬푸드 육성조례와 기본계획, 전담조직의 설치 요구
  -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요구 포함

## 전세계 대도시 먹거리 계획(food system plan) 수립 사례 목록

지역	유형	연도	컨셉	형태	추진주체	목표
런던 <sup>1)</sup>	대도시	2006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전략계획 <sup>2)</sup> 실 행 계 획 (2007) <sup>3)</sup>	위 원 회 (2004)	건강, 환경, 문화, 경제, 식량자급
토론토 <sup>4)</sup>	대도시	2010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전략계획 <sup>5)</sup>	위 원 회 (1990)	주민지원, 지역경제, 기아근절, 도농연결, 정보제공
밴쿠버 <sup>6)</sup>	대도시	2010	sustainable, resilient, healthy regional food system	전략계획	위 원 회 (2004)	가까운 먹거리의 생산능력 증대, 지역경제에서 먹거리부문의 역할 증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택, 모두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며 적절한 가격의 먹거리 제공, 생태적으로 건강한 먹거리 체계
암스테르담 <sup>7)</sup>	대도시	2007	healthy, sustainable, regional	전략계획 <sup>8)</sup>	위원회	로컬푸드 공급, 건강한 식습관, 도농균형, 농업경관보전
샌프란시스코 <sup>9)</sup>	대도시	2009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시장명령 <sup>10)</sup>	위원회	
시애틀 <sup>11)</sup>	대도시	2007 2010	Local Food Action Initiative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sup>12)</sup>	의회결의안 <sup>3)</sup> 법률 <sup>14)</sup>	시정부	사회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발전, 긴급상황 대비
맨체스터 <sup>15)</sup>	대도시	2007	good food	전략계획 <sup>16)</sup>	위 원 회 (2004)	건강, 환경, 지역경제, 지역사회, 문화
벨로리존테	대도시	1993	healthy food for all	정책	부서 <sup>17)</sup> 위원회	먹거리 빈곤의 퇴치, 지역 농민 보호
뉴욕 <sup>18)</sup>	대도시	2010	sustainable food system	정책보고서 <sup>19)</sup>	시의회	기아와 비만 퇴치, 지역농업과 식품제조 활성화, 폐기물과 에너지 소비절감 등 12개 목표
런던 캠프두 <sup>20)</sup>	기초	2009	good food	전략계획 <sup>21)</sup>	지역NHS, 지 자 체 , NGO	공공부문, 재배장려, 식교육, 기업부문, 가정부문, 커뮤니케이션
워털루(캐나다)	광역지자체	2007	healthy community food system	전략계획 <sup>22)</sup>	라운드 테이블 (2007) <sup>23)</sup>	모든 주민이 건강 지속에 필요한 먹거리를 살 수 있도록 보장, 지역농지 보전, 소비자들의 먹거리 관련 지식 강화, 건강한 먹거리의 가용성 증대 통해 건강한 선택 보장, 농촌사회 보전 위해 지역시장에 판매하는 농가의 생존력 증대
영국 플리머스 <sup>24)</sup>	중소도시	2011	sustainable food city	-먹거리현장 <sup>25)</sup> -실행계획 <sup>26)</sup> (2011~14)	파트너십 (Plymouth Food Partnership)	활발한 지역경제 모든 시민의 건강과 웰빙 복원력 있고 굳게 뭉친 지역공동체 평생학습과 숙련 생태발자국의 감축
이탈리아 피사	중소도시	2011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먹거리현장 -먹거리계획 <sup>27)</sup>	피사시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지역의 음식문화 증진 / 음식, 건강,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시민이해 증진 / 식습관 개선과 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민혁신 증진 / 로컬푸드 공급역량 강화 / 먹거리보장을 위한 정책의 혁신과 통합 촉진

- 
- 1) <http://www.london.gov.uk/londonfood>
  - 2) <http://www.london.gov.uk/londonfood/useful-Information/mayors-food-strategy-06.jsp>
  - 3) <http://www.london.gov.uk/londonfood/docs/london-food-strategy-implementation-07.pdf>
  - 4) [http://www.toronto.ca/health/tfpc\\_index.htm](http://www.toronto.ca/health/tfpc_index.htm)
  - 5) <http://wx.toronto.ca/inter/health/food.nsf>
  - 6) <http://www.metrovancouver.org/planning/development/AgricultureAndFood/Pages/RegionalFoodSystemStrategy.aspx>
  - 7) <http://www.proeftuin.amsterdam.nl>
  - 8) <http://www.proeftuin.amsterdam.nl/asp/download.aspx?file=/contents/pages/269269/publieksversieprogrammaplanproeftuinamsterdamv3kort.pdf>
  - 9) <http://www.sfgov3.org/index.aspx?page=754>
  - 10) [http://www.sfgov3.org/2Fftp%2Fuploadedfiles%2Fsf%2Ffood%2Fpolicy\\_reports%2FMayorNewsomExecutiveDirectiveonHealthySustainableFood.pdf&h=96cf0](http://www.sfgov3.org/2Fftp%2Fuploadedfiles%2Fsf%2Ffood%2Fpolicy_reports%2FMayorNewsomExecutiveDirectiveonHealthySustainableFood.pdf&h=96cf0)
  - 11) [http://www.seattle.gov/council/conlin/food\\_initiative.htm](http://www.seattle.gov/council/conlin/food_initiative.htm)
  - 12) <http://www.seattle.gov/urbanagriculture>
  - 13) <http://clerk.ci.seattle.wa.us/~scripts/nph-brs.exe?s1=8&s2=8&s3=31019&s4=8&Sect4=AND&l=208&Sect2=THESON&Sect3=PLURON&Sect5=RESN1&Sect6=HITOFF&d=RES3&p=1&u=%2F~public%2Fresn1.htm&r=1&f=G>
  - 14) <http://www.seattle.gov/DPD/Planning/UrbanAgriculture/Overview/default.asp>
  - 15) <http://www.foodfutures.info>
  - 16) <http://www.foodfutures.info/site/images/stories/food%20futures%20strategy%202007.pdf>
  - 17) <http://bit.ly/nfvZFc>
  - 18) <http://www.nyc.gov/html/nycfood>
  - 19) [http://council.nyc.gov/downloads/pdf/foodworks\\_fullreport\\_11\\_22\\_10.pdf](http://council.nyc.gov/downloads/pdf/foodworks_fullreport_11_22_10.pdf)
  - 20) <http://www.camden.nhs.uk/good-food-for-Camden.htm>
  - 21) [http://www.camden.nhs.uk/downloads/Camden\\_Food\\_Strategy.pdf](http://www.camden.nhs.uk/downloads/Camden_Food_Strategy.pdf)
  - 22) [http://chd.region.waterloo.on.ca/web/health.nsf/4f4813c75e78d71385256e5a0057f5e1/54ED787F44ACA44C852571410056AEB0/\\$file/FoodSystem\\_Plan.pdf?openelement](http://chd.region.waterloo.on.ca/web/health.nsf/4f4813c75e78d71385256e5a0057f5e1/54ED787F44ACA44C852571410056AEB0/$file/FoodSystem_Plan.pdf?openelement)
  - 23) <http://www.wrfoodsystem.ca>
  - 24) <http://www.foodplymouth.org>
  - 25) [http://www.foodplymouth.org/?page\\_id=61](http://www.foodplymouth.org/?page_id=61)
  - 26) [http://www.foodplymouth.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12/01/action-\\_plan\\_2012.pdf](http://www.foodplymouth.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12/01/action-_plan_2012.pdf)
  - 27) [http://api.ning.com/files/1OfrrxI3qE3doS7sPNCc5uc1HNT1qrozKS0Cy3Dkww46li1MoNkSLHsZuNyd1nqzzEBK4-Mz9ROXK97F6MjkA2-5IJHZ6xkP/cartadelcibo\\_strategiadelcibo\\_15ottobre2011.pdf](http://api.ning.com/files/1OfrrxI3qE3doS7sPNCc5uc1HNT1qrozKS0Cy3Dkww46li1MoNkSLHsZuNyd1nqzzEBK4-Mz9ROXK97F6MjkA2-5IJHZ6xkP/cartadelcibo_strategiadelcibo_15ottobre2011.pdf)



프랑스 랑그도크-루시용 광역정부 광역식품계획

Regional Food Plan Languedoc-Roussillon

CRALIM of June 26, 2012 (2012.6.26)

전략축	목표	실천계획
1. 유기농 생산 / 소비 발전	유기농 공급망 구축	유기농 부문의 거버넌스 구축 생산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강화 생산과 시장에 대한 지식 개선 비즈니스 프로젝트 지원 광역적 의사소통 전략 수립
	유기농 산물의 소비 증진(특히 외식/급식)	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지역생산품 조직화 가정 식사 유기농 시장의 구조화 및 전문화 음식 인력 및 서비스 교육훈련 집단급식소 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 학교 프로젝트의 추진
2. 짧은 유통 증진 통한 생산자-소비자 간 관계 창출	짧은유통에 관한 인식 개선 및 확산	참고자료의 확보 규제 모니터링 제공 수단의 공유 - 이해당사자 네트워킹
	농민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개선	정보자료 개발 지역내 교육기회 확인 및 개발
	프로젝트 실현 및 개발 지원	경영체 장애요인의 저감 위원회의 발전
	짧은유통 개발의 구조화	집합적 행위의 등장과 구조화의 장려 로컬푸드 정책의 개발
	홍보-의사소통의 개선	소비자 및 지역공동체와의 의사소통
3. 청소년 식 교육	음식-교육 관련 행위자 간 시너지 제고	행위자의 확인 공동체 문화의 창출 자원의 공유
	미각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동력의 강화	교육 및 의사소통 관련자료의 생산 교육훈련의 시행 숙련자 네트워크의 구축 연중 특정 행사기간 지정
	‘휴식을 위한 과일’사업 증진	이 사업을 비만계획(PO), 국가건강영양계획(PNNS), 학교건강계획의 핵심에 배치 실행에 관한 의사소통 광역 지자체에 대한 장려 및 지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 교육노력의 개시 및 지원	농업학교/농과대학의 요리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공교육을 통하여 PJJ 이하의 청소년 대상 아동 대상
4. 외식/급식 식품공급 개선	지역 전문가들에 대한 이해와, 수요와 공급의 매칭	식품서비스 관련 다양한 행위자의 확인 공공급식 공급자와 구매자의 연결 지역수준 공급의 조직화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구매 관행의 개선
	식품품질 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지원	급식/외식운영지식의 개선 지자체 전략 확립 관리자/조리사 교육훈련 고객과의 의사소통 개선
5. 빈곤층 지원식품 공급 개선	관내 식품지원에 관한 지식의 증진	지원식품 배분의 관내 상황에 관한 연구 적절한 관리기구의 특화
	공급의 개선	제공식품의 다양화(생선, 과일, 채소) 배분조직의 최적화
	수혜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수혜자 관련 프로젝트 시행 장려
	관련 종사자단체 및 자원봉사자단체의 기법과 관행의 개선	교육훈련 지속 및 확대 관행 교류의 조직화
6. 소비자 보제공 식문화 증진	식품 관련 지식 및 정보 개선	공식 품질표시에 대한 의사소통 강화
	식문화와 지역음식 증진	지역유산에 관한 지식 개선 유산의 날을 통한 장려 특정 그룹(특히 교도소 재소자)을 상대로 한 관심의 제고

## 나고야시 신 농업진흥기본방침 <나고야 농업 라이프플랜>(2006)

"농"이 있는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목표로

### 1) "농"의 영위 지원: 힘내자 나고야 농업

산업으로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더해, 새롭게 시민의 생산활동 참여 등을 지원

- 경영 안정: 시민 누구나 생산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주체 육성, 직판장 정비 통한 지산지소 추진 도모,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 자금융자, 생산기술 보급, 농업과 도시화 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처(농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농약비산 등)
- 생산기반 확보: 우량농지 보전, 시민농원 지원, 친환경농업 추진, 농업시설의 협력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 2) "농"이 있는 생활 만들기: 즐기자 "농"이 있는 생활

시민이 농산물의 소비자일뿐 아니라 "농"과의 만남, 생활에 "농"을 도입한 여유롭고 윤택한 생활

- 농과 접하기: 시민농원 개설 등 시민지원체제 충실화 도모, 농업공원 통한 체험학습 활성화
- 생활에 "농"의 도입: 근교농지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농 관련 전통문화 보전계승 응원

### 3) 풍요로운 식생활의 추진: 몸과 가까운 농산물로 식생활을 풍요롭게

가까운 농산물로 시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실현

- 풍요로운 식생활 추진: 안전·안심 확보노력, 식교육, 고품질 농산물 생산활동 응원, 국산농산물 소비확대/폐기량 감축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기여

### 4) "농"을 통하여 고리 만들기: 확대하자 "농"과의 만남·교류

"농"과의 만남·교류를 통해 농가와 시민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촉진

- 정보 발산: 농업공원과 직판장을 거점화, 인터넷 활용
- 교류 촉진: 도시속 교류진행, 수확체험농원(만남농원) 활성화, 직판장 활용, 자원봉사 등 시민활동 촉진, 농의 지혜와 능력의 활용

### 5) "농"이 가져다주는 은혜 누리기: 살리자 "농"의 다면적 기능

도시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하는 "농"의 다면적 기능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추진

- 편안한 공간 창출: 용수로/저수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 농지기능 활용: 자원순환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부서: 나고야시 환경토목국

출처: <http://www.city.nagoya.jp/ryokuseidoboku/cmsfiles/contents/0000002/2520/sassi.pdf>

##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시의 먹거리정책

<p>&lt;목표&gt; 시민들의 먹거리 및 영양의 보장(food and nutritional security): 모든 시민들이 좋은 먹거리(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 문화적 다양성, 건강 보장)에 대해 접근할 영구적인 권리를 실현</p>	
<p>&lt;7대 전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시스템 전체에 걸쳐 물류와 공급사슬의 통합</li> <li>- 지역 생산자들을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시켜 가격을 낮추고 식량주권을 증진</li> <li>- 지역의 다각화된 농업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의 활용</li> <li>- 먹거리보장과 좋은 영양에 대한 대중교육</li> <li>- 건강한 고품질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생산물에 대한 시장 규제</li> </ul>	
<p>1. 먹거리 판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중식당</li> <li>- 기초 먹거리꾸러미 판매</li> </ul> <p>2. 먹거리 및 영양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가족소농 구매프로그램 결합)</li> <li>- 영양문제 방지 및 대처: 성분강화 밀가루 배급 등</li> <li>- 푸드뱅크</li> </ul> <p>3. 식품시장의 공급 및 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료품 소매</li> <li>- 농민 직판</li> <li>- 농민장터와 유기농시장</li> <li>- 기초식품군 가격조사</li> </ul> <p>4. 도시농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 텃밭</li> <li>- 학교텃밭</li> <li>- 과수원(Pro-Orchard)</li> <li>- 도시농업 워크샵</li> </ul> <p>5. 먹거리소비에 대한 교육</p> <p>6. 일자리 및 소득창출</p>	<p>&lt;실적&gt; (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중식당: 6개소에서 연간 367만식 판매(일 17,000식)</li> <li>- 기초 먹거리꾸러미(2009): 11,045회 제공, 64.4톤 판매, 12개소 운영</li> <li>- 학교텃밭/지역공동체텃밭: 학교텃밭 67개소 (54,472명), 지역공동체텃밭 33개소(5,813명)</li> <li>- 직판: 29개소, 인접7개지자체 생산자단체 23개, 664톤 판매</li> <li>- 가족소농 구매: 334농민, 397,500톤 구매, 농민 1인당 연간4,500헤알 소득(약 300만원)</li> <li>- 유기농시장: 8개소, 생산자단체 5개, 133톤 판매</li> </ul>

## 토론토 먹거리 헌장 (Toronto's Food Charter, 2001년 제정)<sup>28)</sup>

1976년 캐나다는 “모든 사람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근본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 경제 및 문화권에 관한 유엔 규약”에 서명하였다. 토론토 시는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에 대한 국가적 노력 및 다음과 같은 신념들을 지지한다.

- 모든 토론토 주민들은 영양있고 가격적으로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공급을 받아야 한다.
- 먹거리 보장은 주민들의 보건의료 필요를 줄여줌으로써 건강과 복지에 기여한다.
- 먹거리는 토론토 경제의 핵심 요소이며, 먹거리 보장은 식품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강화시킬 수 있다.
- 먹거리는 지역사회와 다양성을 축복하게 해주며, 우리 시의 문화에 있어 중요한 일부이다.

먹거리 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토론토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것이다.

- \* 모든 주민들에게 긴급 먹거리 구호자들에 호소할 필요 없이 적절한 양의 안전하고 영양많고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 보장
-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에 대한 안정적이고 존엄한 접근을 지지하는 소득, 고용, 주택, 대중교통 정책 옹호
- \* 시의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먹거리 전통을 잘 보여주는 행사 지원
- \* 건강한 발육 증진과 식원성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 프로그램과 서비스 후원
- \* 도시 시설들에서 적절한 가격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편리한 접근 보장
- \* 건강, 사회 및 환경적 책임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먹거리 조달 관행 채택
- \* 건강한 먹거리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협동조합, 기업 및 정보조직들과의 협력
- \* 먹거리의 자급을 증진하고 건강을 개선하며 보다 쾌적한 환경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증진하는 텃밭가꾸기 권장
- \* 지역의 농지 보호 및 도시 농업 지원
- \*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기물의 순환이용 권장
- \* 모든 시민과 시 관련 기관들에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건강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먹거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고취하는 시민문화 고양
- \* 지역사회 기관, 주민단체, 기업 및 기타 정부기관들과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28) [http://www.toronto.ca/food\\_hunger/pdf/food\\_charter.pdf](http://www.toronto.ca/food_hunger/pdf/food_charter.pdf)

The Vancouver Food Charter presents a vision for a food system which benefits our community and the environment. It sets out the City of Vancouver's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a coordinated municipal food policy, and animates our community's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in conversations and actions related to food security in Vancouver.

## VISION

The City of Vancouver is committed to a just and sustainable food system that

- contributes to the economic, ecological, and social well-being of our city and region;
- encourages personal, business and government food practices that foster local production and protect our natural and human resources;
- recognizes access to safe, sufficient, culturally appropriate and nutritious food as a basic human right for all Vancouver residents;
- reflects the dialogue between the community, government, and all sectors of the food system;
- celebrates Vancouver's multicultural food traditions.

## PREAMBLE

In a food-secure community, the growing,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healthy, safe food is economically viable, socially just,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regionally based.

Some members of our community, particularly children, do not have reliable access to safe and nutritious food. In addition, much of the food we eat travels long distances from where it is grown and processed and is dependent on fossil fuels at every stage.

---

29) [http://vancouver.ca/files/cov/Van\\_Food\\_Charter.pdf](http://vancouver.ca/files/cov/Van_Food_Charter.pdf)

Dependency on imports for our food increases our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our vulnerability to food shortages from natural disasters or economic set-backs. Overall food security is increasingly influenced by global factors that affect our community's ability to meet our food system goals.

Community food security needs the involvement of all members of our community, including citizens, consumers, businesses and governments. When citizens are engaged in dialogue and action around food security, and governments are responsive to their communitie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sound food policy can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ll sectors of the food system and the community.

In 2002, the City of Vancouver adopted sustainability as a fundamental approach for all the City's operations. The goal of a just and sustainable food system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chieving a "Sustainable Vancouver".

## PRINCIPLES

Five principles guide our food system:

1.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Locally-based food systems enhance Vancouver's economy. Greater reliance on local food systems strengthens our local and regional economies, creates employment, and increases food security.
2. Ecological Health: A whole-system approach to food protects our natural resources, reduces and redirects food waste, and contributes to the environmental stability and well-being of our local, regional, and global communities.
3. Social Justice: Food is a basic human right. All residents need accessible, affordable, healthy, and culturally appropriate food. Children in particular require adequate amounts of nutritious food for normal growth and learning.
4. Collaboration and Participation: Sustainable food systems encourage civic engagement, promote responsibility, and strengthen communities. Community food security improves when local government collaborates with community groups,

businesses, and other levels of government on sound food system planning, policies and practices.

5. Celebration: Sharing food is a fundamental human experience. Food brings people together in celebrations of community and diversity.

To create a just and sustainable food system, we in Vancouver can:

- Be leaders in municipal and regional food-related policies and programs
- Support regional farmers and food producers
- Expand urban agriculture and food recovery opportunities
- Promote composting and the preservation of healthy soil
- Encourage humane treatment of animals raised for food
- Support sustainable agriculture and preserve farm land resources
- Improve access to healthy and affordable foods
- Increase the health of all members of our city
- Talk together and teach each other about food
- Celebrate our city's diverse food cultures

## <샌프란시스코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2009년 7월 9일 시장 명령 09-03

1. 샌프란시스코의 환경적, 경제적 건강성과 함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체계는 공공보건,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성을 증진해야 한다.
2. 기아를 근절하고 모든 주민에게 경제적 수단과는 상관없이 건강하고 영양많은 먹거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시청 부서들의 관심사이다. 어떠한 시민도 굶주리지 않도록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샌프란시스코의 근린 먹거리 환경은 건강한 먹거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원성 질병의 환경적 원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4.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관련 환경영향을 감축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속가능하게 인증된 먹거리를 구매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시의 자원이 사용될 것이다.
5. 시 권역 내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유지에서 지역사회 텃밭, 뒷마당, 옥상, 학교텃밭을 비롯한 도시농업을 통해, 그리고 식용 경관조성(edible landscaping)과 농업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먹거리의 생산과 원예교육을 장려할 것이다.
6. 시와 카운티는 녹색 일자리와 로컬푸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먹거리 부문에서의 경제적 기회를 증진할 것이다.
7. 시와 카운티가 먹거리 체계의 환경영향을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은 지역의 비옥한 농지에 달려있다. 시와 카운티는 지역의 일급 농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지원할 것이다.
8. 시와 카운티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재배된 농식품의 판매 기회를 제고함으로써 지역농업을 증진할 것이다.
9. 시와 카운티는 모든 유기물들을 재활용하고, 농업과 원예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을 철폐하며, 도시 전역에서 자연의 생물학적 체계를 증진하는 지속가능한 관행들을 사용할 것이다.
10. 시와 카운티는 먹거리 체계 내의 이해당사주체들과 일반 대중에게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교육시키는 혁신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증진할 것이다.
11. 시와 카운티는 이러한 먹거리 정책의 원칙들을 지지하는 연방 및 주 정책을 옹호할 것이다.







### 농업생산

- 1) 지역의 먹거리생산을 유지, 증진
  - 로컬푸드 공급채널의 강화
  - 뉴욕시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지역 생산자들을 지원
- 2) 도시의 먹거리생산을 증진
  - 도시 먹거리생산을 위한 기존 공간의 활용도 제고
  - 먹거리와 원예 관련 지식의 복원

### 가공

- 3) 식품제조부문 성장과 고용의 창출
  - 이용가능한 적절한 공간의 마련
  - 식품제조업체에 기술적 지원 제공
- 4) 뉴욕시에서 뉴욕시를 위해 가공된 지역생산물의 증진
  - 도농 연계의 촉진
- 5) 뉴욕시에서 식품가공과 관련된 환경영향의 감축
  - 사업체들의 에너지소비 감축 지원

### 유통

- 6) 인프라 개선, 기술적 진보, 대안적 수송, 통합적 계획을 통한 식품유통의 개선
  - 헌츠포인트 식품유통센터의 현재 비전을 최대 잠재치까지 확대
  - 식품 수송의 다양화 및 개선

### 소비

- 7) 더욱 건강한 먹거리 환경의 창출
  - 시내에서 서비스가 잘 안되는 지역에서 신선식품 소매점의 확대
  -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는 매장들에 대한 지원 강화
- 8) 기아안전망 및 영양프로그램의 강화
  - 연방식품프로그램의 개선과, 등록 관련 지역적 장애물 제거
- 9) 기관급식의 영양 개선
  - 영양많은 식사를 위하여 뉴욕시 기관들의 건강한 음식 조리능력 확대
- 10) 먹거리, 영양, 요리지식 확보를 위한 기회의 양적·질적 증대
  - 학교중식프로그램(SNAP)-교육펀드의 극대화

### 소비후

- 11)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쳐 폐기물의 감축
  - 가정, 상업, 공공부문의 퇴비화 증대
- 12) 푸드시스템에서 자원 재활용의 증진
  - 식품가공/포장 관련 폐기물 재활용의 증진

<먹거리 연결을 가꾸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토론토 먹거리 체계를 향하여>(2010)



**Cultivating Food Connections:**

**Toward a Healthy  
and Sustainable  
Food System  
for Toronto**

May 2010

**1. 먹거리 친화적인 근린 지원**

- 1) 먹거리코디네이터를 확대하여 모든근린에서 활용
- 2) 먹거리활동을 커뮤니티센터에 통합
- 3) 먹거리관련 기존 자산들의 활용
- 4) 도시농업의 확대
- 5) 시 정책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확대
- 6) 먹거리 접근성 문제와 해결책의 확인
- 7) 저소득층 거주지역내 신선식품 소매의 촉진
- 8) 원주민 커뮤니티의 지원
- 9) 토론토커뮤니티하우스징(TCH)의 먹거리기회 지원
- 10) 시 식품지원정책에 있어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확대

**2. 먹거리를 토론토의 신 녹색경제의 핵심화**

- 1) 소규모 식품사업체의 창업 활성화
- 2) 사회적기업 지원
- 3) 다양한 요리의 증진을 위한 이벤트 개최
- 4) 먹거리를 녹색일자리 전략에 포괄

**3. 토론토에서 굶주림 근절**

- 1) 먹거리보장과 소득보장의 옹호
- 2) 커뮤니티 먹거리센터의 확립
- 3) 구호식품공급프로그램에서 영양많은 먹거리 공급확대

**4. 주민들을 먹거리 관련 정보와 숙련으로 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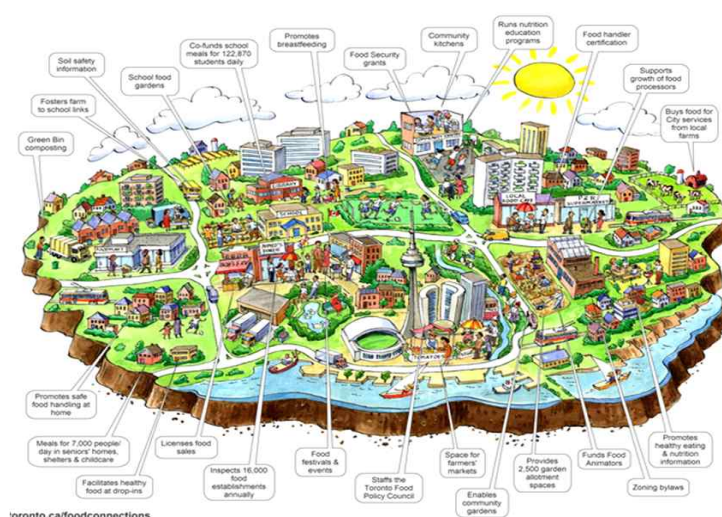
- 1) 학교영양프로그램의 토론토 학교전체 확대
- 2) 식당 메뉴의 영양정보 제공 의무화
- 3) 먹거리 관련 노하우의 시 프로그램 반영
- 4) 토양안전성에 대한 지침 마련
- 5) 시의 먹거리정책을 분명하고 접근가능하게 만들기
- 6) 학교에서 먹거리 문해력의 증진
- 7) 먹거리와 건강을 토론토 신규이주자에 대한 지원에 반영

**5. 도시와 농촌을 먹거리로 연결**

- 1) 농장에서 학교까지의 연결고리 만들기
- 2) 시의 로컬푸드 공공조달 확대
- 3) 광역 수준의 지역먹거리 전략을 위해 토론토 인접 지방정부들과 협력
- 4) 지역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와의 연결

**6. 연방 및 주정부의 건강 중심 먹거리 정책 수립 촉구**

25 Food Connections to the City of Toronto



## 밴쿠버 광역 먹거리체계 전략계획



### 1. 가까운 먹거리의 생산능력 증진

- 1.1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지의 보호
- 1.2 어류 서식지 복원 및 지속가능한 수산물 원천의 보호
- 1.3 농업생산의 확대 지원
- 1.4 먹거리 생산자의 신세대에 대한 투자
- 1.5 도시지역에서 상업적 먹거리생산의 확대

### 2. 식품부문의 경제적 활력 증진

- 2.1 로컬푸드의 가공, 저장, 유통능력 제고
- 2.2 대규모 공공기관의 구매정책에 로컬푸드의 포함
- 2.3 로컬푸드의 직거래 기회 증진

### 3.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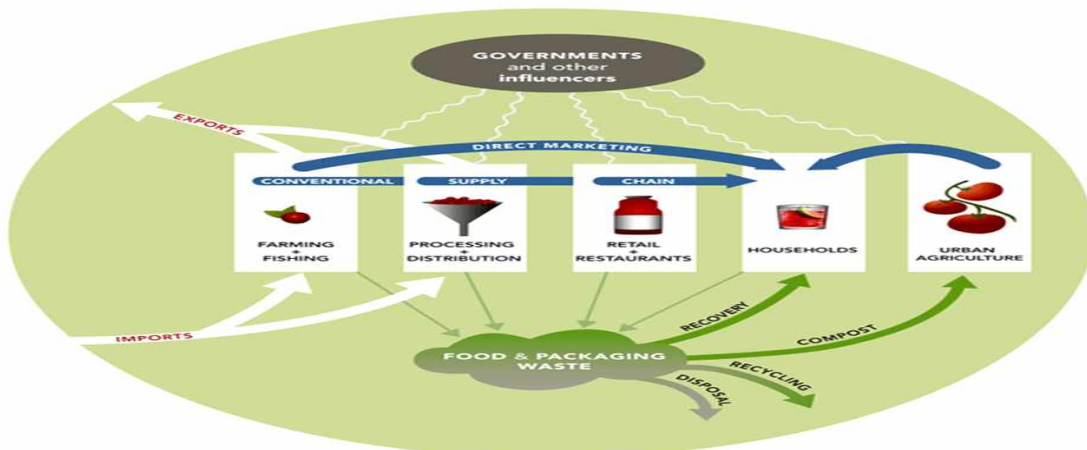
- 3.1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 지원
- 3.2 먹거리선택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 3.3 학교에서 음식문해력과 숙련도의 증진
- 3.4 로컬푸드의 맛과 음식의 다양성에 대한 감사

### 4.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며 적절한 가격의 먹거리에 대한 모든 시민의 접근성 보장

- 4.1 영양많은 먹거리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증진
- 4.2 도시농업 장려
- 4.3 영양많은 먹거리의 회복을 위한 NGO의 장려

### 5. 생태적 건강성을 지니는 푸드시스템

- 5.1 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 보호 및 증진
- 5.2 푸드시스템 내 폐기물 감축
- 5.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실천의 채택 촉진
- 5.4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비



밴쿠버 푸드시스템 개선방안 모식도(출처: 밴쿠버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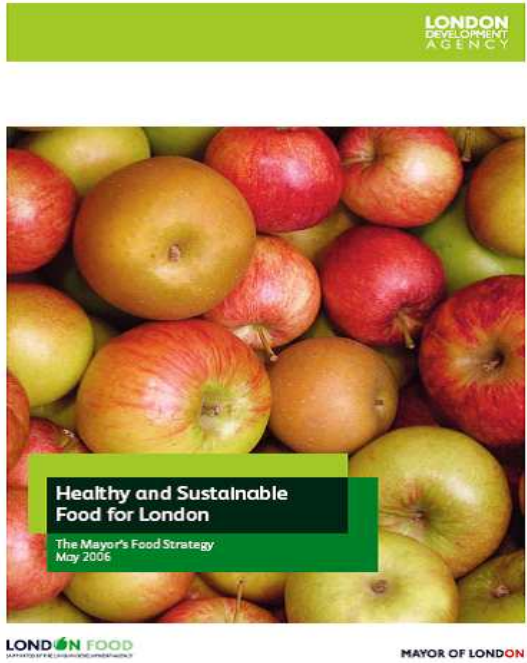
## 런던 먹거리 전략 보고서(2006)

### 비전

-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하고 가격적으로 적절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활력있는 먹거리 경제가 있는 런던
- 런던의 다양성을 축복하고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보장하는 런던

### 분야별 계획

- 강력한 경제 지원
  - 먹거리 관광과 문화 증진
  - 특화먹거리 제조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적절한 훈련
  - 독립 상점(식료품점, 정육점, 빵집 등) 지원
- 소비자를 연계시켜서 이들의 식사 개선 지원
  - 건강한 먹거리 홍보 캠페인
  -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 선택 증진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 시도
  - 시민들이 먹거리를 재배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창출
  - 건강한 먹거리 선택 증진에 대규모 유통업자를 개입시키기
  - 식품포장의 양 감축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먹거리 공공조달의 개선
  - 중소 사업체에 공공 및 민간부문 조달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런던지역 병원 급식 시범사업에서 얻은 교훈의 적용
  - 공공 및 민간부문 먹거리 조달 지원 서비스의 증진
- 광역 및 전국 수준의 생산자와 런던 시장과의 연계 강화 및 발전
  - 런던 시장의 특정 수요 충족을 위한 생산에서의 변화 장려(예컨대 런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민족 먹거리의 지역생산 강화)
  - 마케팅 비용 공유와 조달계약에 대한 접근 지원을 위한 생산자 연합 장려
  - 소규모 공급자들의 유통망 공유를 위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연구조사
- 건강한 학교 만들기
  - 학교에서의 요리 및 먹거리 교육의 증진 및 지원
  - 학교급식 질 개선(교육, 시설, 정치적 지원 부족, 부적절한 예산 같은 장애물의 극복)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개선(건강한 자동판매기 만들기, 아침식사 모임 확대, 어린이 대상 광고의 성격 바꾸기 등)
  -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선한 음료수에 대한 손쉬운 접근 제공
- 음식쓰레기 감축
  - 재활용의 확대 및 개선
  - 음식쓰레기 관련 행위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인센티브 검토
  - 음식쓰레기 수거 프로그램 확립
  - 주요 유통업자들에 대한 포장 감축 정책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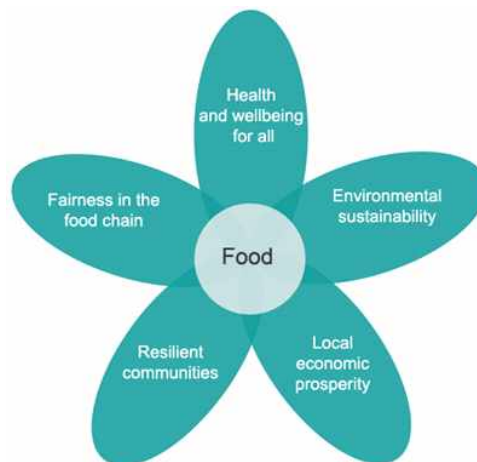
<p>&lt;전략목표&gt; 건강, 환경, 경제, 문화, 식량 보장(food security)</p> <p>&lt;단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생산</li> <li>* 가공, 제조</li> <li>* 운송, 저장, 배송</li> <li>------(수요측면) ↓</li> <li>* 소매</li> <li>* 구매</li> <li>------(공급측면) ↑</li> <li>* 조리, 저장</li> <li>* 식사, 소비</li> <li>* 폐기</li> </ul>	
---	--

<p>(런던시 캠프구)</p> <p>&lt;캠튼을 위한 좋은 먹거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gt;(2009~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주체: 캠프건강보험(NHS), 지자체, NGO(SUSTAIN)</li> <li>* 비전 및 목표 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 증진, 건강불평등 완화</li> <li>2. 환경적 지속가능성 달성</li> <li>3. 지역사회의 참여 증진</li> <li>4. 지역경제의 구축</li> <li>5. 문화적 다양성 증진</li> </ol> </li> <li>* 주제(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부문</li> <li>2. 텃밭가꾸기</li> <li>3. 식교육</li> <li>4. 사업체의 참여 및 지원</li> <li>5. 가정 영역</li> <li>6. 의사소통(생산자-소비자간, 각 부문간)</li> </ol> </li> <li>* 실행계획 수립</li> </ul>
--

## 영국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네트워크>

(The Sustainable Food Cities Network)<sup>30)</sup>(2011 창립)

- 카디프, 브리스톨 등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20개 도시가 참여
- 5대 주제
  - 1) 건강과 웰빙,
  - 2) 환경적 지속가능성,
  - 3) 지역경제의 번영,
  - 4) 복원력을 갖춘 지역공동체,
  - 5) 먹거리사슬의 공정성



30) <http://www.soilassociation.org/sustainablefoodcities>

## 도쿄와 오사카의 관련 정책 목록

도쿄도	산업노동국 농림수산부 <sup>31)</sup> - 조정과 - 식품안전과 - 농업진흥과 - 수산과 - 임업과	농산어촌 생활체험 시민농원 도시농업 생산정보 제공 도쿄지역특산물 식품인증제 식육: 추진계획(2011 제2차계획) <sup>32)</sup> / 종합사이트 운영 <sup>33)</sup> 도쿄 특산재료 사용업체 등록제
	도쿄 농업 (농협, 재단법인 도쿄도 농림수산진흥재단, 도쿄도, 생산자관련단체 공동운영)	종합사이트 운영 (tokyonogyo.jp) - 도쿄의 식재료 - 구매처(품목별, 가공품, 식당, 직판장) - 체험(관광농원, 체험농원, 시민농원) - 취농 - 도쿄농업 지원하기 - 관련 정보
오사카부	환경농림수산부 농정실 유통대책실	새로운 농림수산업 진흥비전 "식과 녹"(2002) <sup>34)</sup> 오사카산 농식품 브랜드 마케팅 나니와 전통채소 육성 도시농업 농을 즐기는 시설(휴양농원, 시민농원 등) 직판장 소개 농업공간을 지키는 활동(보전기금, 팬클럽, 학습모임 등)
	건강의료부 식안전추진과	오사카 식 안전안심 추진계획(2008-2012) <sup>35)</sup> 오사카판 식 안전안심인증제도 <sup>36)</sup>
	건강의료부 보건의료실 (& 유통대책실)	제2차 오사카 식육추진계획(2012) <sup>37)</sup>

## 이탈리아 피사시 먹거리계획의 주요 정책수단들

1.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지역의 음식문화 증진 2. 음식, 건강,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시민이해 증진 3. 식습관 개선과 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민혁신 증진 4. 로컬푸드 공급역량 강화 5. 먹거리보장을 위한 정책의 혁신과 통합 촉진	
학교 과일간식 공급 생수 대신 무료로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급소(Major's water ) 푸드마일 캠페인 학교급식 농민장터 연대적 구매그룹(GAS) 도시농업 게릴라 가드닝 생물다양성 축제 종자 갈무리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탄소 라벨링 지속가능한 시장 지속가능한 소비자 0 Km 식재료 식당 간식 자판기 탄소발자국 계산기 Last minute market[폐기 직전 먹거리를 수거, 자선 기관에 기부하는 단체] 킷켓 보이코트 (팜유 생산으로 오랑우탄이 죽어가는 데 대해, 팜유 사용 네슬레 초콜렛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워크숍 슬로푸드

31) <http://www.sangyo-rodo.metro.tokyo.jp/norin/sogoannai/sogoannai.htm>

32) [http://www.sangyo-rodo.metro.tokyo.jp/norin/sogoannai/plan/syokuiku\\_keikaku/syokuiku.htm](http://www.sangyo-rodo.metro.tokyo.jp/norin/sogoannai/plan/syokuiku_keikaku/syokuiku.htm)

33) <http://www.sangyo-rodo.metro.tokyo.jp/norin/syoku/syokuiku/syokuiku.html>

34) <http://www.pref.osaka.jp/kannosomu/bijyon>

35) <http://www.pref.osaka.jp/shokuhin/keikaku/>

36) <http://www.pref.osaka.jp/shokuhin/ninsyou/>

37) <http://www.pref.osaka.jp/kenkozukuri/syokuikukeikaku2/>



런던,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먹거리정책의 구조적 요인 (Mansfield and Mendes, 2012: 13-15)

항목	런던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먹거리전략 창출 계기	2006년 런던시장 승인	2009년 시장 명령	1991년 (먹거리정책사안에 대한 토론토 시장 자문기구 토론토건강위원회 하위위원회로) 만들어진 토론토먹거리정책위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토론토의 오랜 먹거리정책
시행책임 주도부서/기관	광역런던청(GLA) 푸드팀과 런던푸드위원회(LFB: 자문그룹)가 시행을 감독	샌프란시스코 먹거리정책위원회(시민단체와 공무원으로 구성)와 47개 시청 부서(분야별 실천임무)	토론토 공공보건청(시정부 기관)
인력 지원	런던개발청(LDA)로부터 나왔지만, 현재는 GLA 푸드팀을 통해	2002년부터 보조금, 사무공간 및 기타 기술적 지원을 통해 지원받아오다, 2008년 시 산하에 푸드시스템 담당부서 신설. 47개 시청 부서 담당자에 실천가능한 대응과 정기적 개정을 요구	토론토 공공보건청 인력, 토론토먹거리정책위원회 코디네이터
정책/규제들의 통합	2011 런던계획에 일부 통합되었으나, 전략계획 상의 상당수의 실천과제가 지자체의 권한 밖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명령의 원칙들을 지자체 코드, 일반계획 및 기타 관련 계획·정책문서들에 통합하는데 우선순위. 시청 부서들에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통합을 실천	먹거리전략 우선순위를 기존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 토론토시의 사법·입법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 시청 부서 및 기타 파트너들의 실천과 역할을 분명히 확인
행위자 공동 파트너십	LFB는 2005년 런던푸드 전략계획 입안을 담당했던 자문그룹이었으며, 현재는 시행을 감독. 독립적인 먹거리정책 단체들을 대표하는 위원들과 푸드시스템 각 단계별 전문가들로 구성	명령은 광범위한 공무원, 운동단체, 업계 대표자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짐	핵심 파트너로 토론토 먹거리정책위원회, 토론토 학교위원회, NGO들과 상하위 지방정부들이 있음
시민참여 메커니즘	파트너 단체들의 참여(Sustain, London Food Link, 그리니치 협동조합개발청 등). 자치구의 시민주도 먹거리정책 출범에 대한 지원	몇몇 시민주도 연대체들로부터의 의견개진(San Francisco UA Alliance, San Francisco Food Security Task Force, Southeast Food Access 워킹그룹, Tenderloin Hunger 태스크포스)	60개 이상의 단체와 조직들이 참여하는 공청과정

#### 참고자료4.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 (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11 .

발 의 자 : 의원

##### 제안이유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근거를 마련하여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식재료비의 적정사용비율 확보로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함.

##### 주요내용

- 가.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 다.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약, 유통, 공급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마.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
- 바. 학교급식에는 급식조달센터를 통하여 조달받은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4조).

##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학교급식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재료로 한 무상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실현 및 교육의 일환으로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무상급식”이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4.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산물은 원양어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다. 지역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 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라. 원료의 가공·유통과정에서 방부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첨가제 등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및 유전자 변형이 되었

거나 변질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제3조(학교급식의 기본원칙)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급식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무상급식의 실시
2.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의 사용
3. 학교의 장의 학교급식 직접 운영
4.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식품·식생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학교급식을 통한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제2장 학교급식의 운영

제5조(학교급식 운영방식)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6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급식시설

제7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13조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제8조(급식지원총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총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지원정책 수립
  2. 매년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평가
  3. 식재료 생산계획 조정, 품목선정과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
  4. 급식조달센터 관리·감독
  5. 식재료 생산자에 대한 지원
  6. 제철 건강추천식단과 식재료 품질기준안 마련
  7. 관할지역 교육청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지원 및 홍보
  8.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교육청간의 학교급식 정책·업무 협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급식지원총괄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급식지원총괄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급식조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등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계약, 유통, 현물공급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급식조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급식지원총괄센터에서 급식조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은 급식조달센터의 유통·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급식조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급식조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계약의 특례)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제3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

제11조(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급식 전담 교직원 등 배치) ① 제11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급식에 관한 경비 부담)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 및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 제4장 학교급식 관리

제14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급식조달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조달받은 친환경 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급식에는 해당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그 밖에 식재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과 식단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 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8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제19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식재료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5. 제2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②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식재료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1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식재료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22조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 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①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식재료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식재료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식재료공급업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재료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재료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

## 주제발표 3

### 시군구 먹거리 기본조례(안)

하승수 변호사

\* 이 자료는 녹색당 내.외부에서의 토론을 위해 작성된 초초안 성격의 자료임을 밝혀 둡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농업·농촌·농민을 살려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00시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려사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등을 상위법령으로 거론할 것인지 판단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00시 먹거리 체계”란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쓰레기 처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말한다.

3. “유전자조작”이란 자연적인 농수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유전자를 바꾸거나 유전자를 바꾼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5.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 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근거리에서 생산·가공되어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먹거리를 말한다.

6. “식·농교육”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교육과 농사교육을 연계한 교육을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0시의 먹거리 체계는 방사능, 유전자조작식품(GMO), 식품첨가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추구한다.
2. 00시의 먹거리 체계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소득, 장애,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으며, 채식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먹거리체계를 지향한다.
3. 00시의 먹거리체계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환경보전, 식량주권 확보를 추구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 관련 종사자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생활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실천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제2장 00시 먹거리 정책의 추진과제

### 제1절 안전한 먹거리

제6조(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① 00시는 방사선 내부피폭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유전자조작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① 00시는 유전자조작식품이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00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자는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00시는 먹거리 관련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유전자조작이 이루어진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시민들에게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④ 00시는 매년 유전자조작 식재료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제2조 제7호에서는 “친환경 우수식재료”에 대해 정의하면서, “친환경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식품첨가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① 00시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등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첨가제, 트랜스지방 등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00시는 먹거리 관련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권고하고, 시민들에게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③ 00시는 매년 제1항에 언급된 성분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 제2절 건강한 먹거리

제9조(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등) ① 00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비인가대안학교, 홈스쿨링을 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00시는 건강한 학교밥상을 위해 모델개발, 아침식사 공급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사회적 약자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① 00시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빈곤층·노숙인 등이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00시는 제1항의 실현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00시는 제1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 00시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육류 섭취가 낳을 수 있는 비만, 성인병,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의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00시는 정제설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제5호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00시는 제1,2항의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채식선택권의 보장) ① 00시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채식을 하는 사람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00시는 음식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③ 00시는 채식선택권이 보장되는 식단의 개발,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절 지속가능한 먹거리

제13조(로컬푸드의 확대) ① 00시는 지역 내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로컬푸드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00시는 제1항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식재료 차액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군사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장
4. 「학교보건법」 제2조의 학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00시는 로컬푸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로컬푸드 생산단지 조성,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① 00시는 유희지, 공원, 녹지,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00시는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 확보,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장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00시는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농업에 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등) ① 00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음식 재료 또는 음식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00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 양을 줄여 배출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 제4절 교육, 홍보 등

제16조(식·농교육의 실시) ① 00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교육을 포함한 식·농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식·농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역량 키우기,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

한 판단력 배양,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식·농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④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식·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00시는 학교농장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학교에서의 식·농교육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식·농교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홍보) ① 00시는 이 조례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00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장 00시 먹거리 기본계획

제18조(지역먹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00시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제2장의 추진과제별 추진계획
3.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지역먹거리 관련 조사·연구
5. 식·농교육 등 교육 실시 방안
6.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7.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먹거리 체계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빈곤층, 노숙인 등의 의견은 따로 수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제21조에 의한 지역먹거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실행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신설·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장 지역먹거리 위원회와 센터

제21조(지역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00시 지역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00시 먹거리 관련 정책목표의 수립
2. 제18조에 따른 지역먹거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지역먹거리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0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00시 지역먹거리 담당 국장(또는 과장)
2. 00시 보건소장
3. 교육의원 또는 00교육청 급식 담당 국장(또는 과장)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5. 지역먹거리센터장
6. 지역 농업, 도시농업 관련 단체 대표
7. 음식업 관련단체 대표
8.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9. 생활협동조합 및 시민단체, 먹거리 관련 단체 대표
10. 관심 있는 시민

③ 시장은 위 제2항 제10호의 사람을 위원에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지원자가 정원을 넘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00시청 담당과장이 맡는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00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00시 지역먹거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교육, 실태조사, 민.관협력 등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00시 지역먹거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00시 지역먹거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관한 정보제공
2. 식·농교육 등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민.관협력의 촉진
4. 타 지역과의 교류.협력
5.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또는 지원
6. 기타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둔다.

- ④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 1. 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 3. 그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⑥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운영위원회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
- ⑦ 제5항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의 장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⑧ 시장은 지역먹거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 제5장 보칙

제27조(시민활동의 지원) 시장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